2018 국정감사로 본

문재인 정부 112대 실정

자유한국당

차 례

CONTENTS

>> 국정감사로 본 문재인 정부 7대 주요 실정 ····· 4

>> 국회 상임위원회별 문재인 정부 112대 실정

법제사법위원회 ····· 13
정무위원회 ····· 17
기획재정위원회 ····· 23
교육위원회 ····· 3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41
외교통일위원회 ····· 49
국방위원회 ····· 57
행정안전위원회 ····· 6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7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8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89
보건복지위원회 ····· 95
환경노동위원회 ····· 103
국토교통위원회 ····· 109
여성가족위원회 ····· 115
[고용세습채용비리] ····· 119

국정감사로 본
문재인 정부
7대 주요 실정

1 소득주도성장이 불러온 **경제 참사**

최악의 일자리 성적

- 올 초부터 실업자 100만 명 이상(역대 최고)
-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청년 실업률
  (1999년 외환 위기 10.4%→2018년 3분기 9.4%)
- 갈수록 급감하는 신규 취업자, 늘어나는 초단기 근로자
- 장기실업자(2018년 월평균 15만 명) 외환위기 이후 최다, 실업급여는 5조 돌파
- 가짜 일자리로 국민 눈속임, 고용창출력 바닥 드러낸 文 정부
- 정권 맞춤형 통계 생산을 위해 국가통계의 신뢰 기반까지 뒤흔든 청와대
- 국민 혈세 충당 공무원 증원

거꾸로 가는 소득주도성장

-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기업수익 악화, 국내 자금 이탈
- 가계부채 사상 첫 1,500조 돌파
- 지속적으로 하락추세인 소비자심리지수(CCSI) (2018년 1월 110→10월 99)
- 소득 격차 심화 고착화된 양극화, 먹고살기 힘든 저소득층

최저임금 과속 인상의 폐해

- 국제 경쟁력 타격 전망(OECD 경고)
- 생존권 위협받는 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
- 역대 최고 수준의 자영업자 폐업률
- 자영업의 위기로 인한 중산층 붕괴 우려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산업 현장의 혼란

2 일자리 도둑 고용세습 **채용비리**

文 정부 권력 유착형 채용비리

-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채용비리
- 속속히 드러나고 있는 文 정부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비리
- 문 정부 핵심국정과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명분으로 자행된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
- 전국조직 강성 귀족노조 부당개입 채용비리 의혹
- 신뢰성 없는 국민권익위의 채용비리 전수조사
- 국민의 요구 국정조사 무시하는 정부여당

낙하산은 기본, 전문성은 제로 : 文 정부 캠코더 인사

- 文 정부 출범 이후 340개 공공기관에 365명이 임원으로 임명
- 서민 청년은 단기 알바 일자리, 현 정부 캠코더 인사는 낙하산 특혜 자리

3 북핵 폐기 손 놓고, 국민 안보도 손 놓은 文 정부

북한 눈치만 보는 청와대

-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위헌적·불법적 비준
- 북한 퍼주기 예산 증액
- 대북제재 완화 전도사 자처한 文 대통령 유럽순방
- '5.24 조치 해제' 기정사실화 꼼수부리다 논란만 야기(강경화 외교부장관)
- 관세청의 거짓말과 정부의 직무유기-북한산 석탄 수입
- 개성연락사무소 개·보수 비용 뻥튀기
- 국민 자존심 짓밟힌 '냉면이 목구녕으로 넘어갑네까'(北 리선권) 발언
- 국제사회와 역행하는 남북경협 가속운전

국가 생존 위협하는 안보 포기

- 남북군사합의로 인한 심각한 안보 공백 발생
- '국회 패싱'한 남북군사합의서 국무회의 비준 의결
- 한미연합훈련중단으로 한미동맹 약화 및 안보대비태세 구멍
- 청와대 지시로 멈춰 버린 미사일 개발-3축 체계 구축에 차질
- 방위산업 경쟁력 급격한 저하-한국형 전투기개발사업 좌초 위기

북한 인권은 뒷전, 귀 막은 文 정부

- 북한 인권 관련 예산 대폭 감소
- 탈북민 출신 기자 취재배제 방침 고수하는 인권유린 통일부 장관
- 북한 집단 체조 아동 인권 유린에 침묵하는 정부

4 사회보험제도 운용 실패

건강보험료 폭탄 문재인 케어

- 2016년 보장률 하락으로 인한 소요재정 재추계 필요
- 내년도 보험료율 6.46%, 2011년 이후 최대치 인상
- 차기 정부 약 12조 적자, 법정준비금 2027년 고갈
- 3,600여 개 비급여의 졸속 급여화(지금까지 151개 쉬운 급여화만 진행)
- 대형병원 쏠림 및 의료 이용량 증가에 따른 대비 부족

총체적 난국 국민연금

- 국민연금 2088년 누적적자 약 1경 7000조 원,
  (2042년 적자전환, 2057년 기금 소진)
- 국민연금 외화금고은행 선정 관련 수상한 거래 의혹
- 수익률 저조 고려 안한 부실한 4차 재정추계
-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 지연

5

혼란만 가중, 서울 집값 폭등 시킨 **부동산 정책**

부동산 양극화만 심화시킨 文 정부 부동산 정책

- 文 정부 1년 5개월간 서울 집값 폭등
- 오락가락, 갈팡질팡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혼선·불신 가중
- 집값 하락, 미분양 증가 - 고통받는 지방 부동산 시장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불법행위 자행

-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수도권 택지개발계획 불법유출'
- 서울(포천)-세종 간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부동산 투기 의혹

6 재앙적 **탈원전 정책**

막대한 경제적 부담 탈원전 정책

- 초헌법적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의 막대한 적자를 국민 세금·전력산업발전기금으로 틀어막기 감행
- 전기요금 인상으로 기업 수출경쟁력 악화
- 원전 경제상대인 중국에 세계 원전 수출 추월 우려

탈핵 시민단체가 장악한 원자력안전위원회

- 탈핵 성향 시민단체 출신 원자력계 요직 장악
- 비전문가 낙하산 위원 선임, 원자력 안전성 저해
- '라돈 침대' 등 생활방사선으로 국민 불안 가중

난립하는 태양광 발전소

- 저수지, 산림, 염전 등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사업-全 국토가 몸살
- 요식행위에 불과한 태양광 발전시설 환경영향평가
- 산림파괴, 환경훼손, 생태계 위협 주범 태양광 발전소
- 서울시 태양광 보조금 사업, 친여권 업체 3곳이 43% 독차지

7 총체적 난국 **교육정책**

오락가락 교육정책, 철학 없는 교육수장

-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 번복
- 준비안된 고교무상교육, 실시 시기는 오락가락
- 청와대 국민청원 8만 명(임명철회)에 육박했던 유은혜 장관 임명 강행

교육계 좌편향성

- 좌파교육감들의 초법적 전교조 감싸기
- 교육기관장들의 좌편향 역사 인식
- 전북교육청 역사보조교재의 심각한 이념편향성
- 서울교육청 좌편향 친북적 행사 <2018 서울지역 학생 평화통일! 골든벨>

법제사법위원회

-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위헌적·불법적 비준
- 검찰의 편파·부실 수사
-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엄청난 국고 손실 초래
  - 강정마을 구상권 포기 결정 수용

01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위헌적·불법적 비준

- 정부는 10월 23일 국무회의를 열고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를 일방적으로 비준함.
- 특히 법제처는 판문점선언은 '상당한 규모의 재정이 소요될 것' 이란 예상을 토대로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 반면 판문점선언의 후속·이행의 성격을 가진 평양선언은 '사업내용이 가변적이라 현재로서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 등으로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해석해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음.

> ★ 청와대의 비준 불법 논란 POINT ★
>
> ① 헌법 60조 위배
>
> ② 남북관계발전법 적용범위 위반
>
> (통일부 소관인 법으로 국방분야 합의까지 비준)

- 정부는 북한의 지위가 이중적이라며 이를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 불법 논란을 자초하고 있음.
- 더욱이 이런 논란의 중심에 법제처가 있음. 국민들은 현 정부의 국정운영이 합법적인지 아닌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

02 검찰의 편파·부실 수사

- 현 정권과 관련된 수사(드루킹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 금품수수 관련, 김영록 전남지사 선거법 위반 관련 등)는 부실·늑장수사를 하고 있음.
  - 특히 검찰은 드루킹 사건에서 '느릅나무출판사'라는 장소까지 특정했지만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음. 또 피고발인 조사도 거의 하지 않는 등 소극적 수사로 일관하다가 불기소 처리함.
- 반면에 전 정권이나 야당 관련 수사는 '여론용', '먼지털기식'으로 무리하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야당인 심재철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고발한지 4일 만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여당인 신창현 의원은 고발 시점으로부터 20일이 지나서야 압수수색을 실시, 편파수사 논란을 자초함.
- 특히 서울중앙지검은 전 정권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위해 전국적으로 검사를 파견 받아 운영,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민생수사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음.

03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엄청난 국고 손실 초래 - 강정마을 구상권 포기 결정 수용

- 해군은 '16년 3월, 제주 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른 공사지연 손실금 275억 원 중 강정마을 주민과 5개 단체를 상대로 34억 5천만 원의 구상권 청구소송 제기

- 서울중앙지법에서 '17년 11월, 강제조정 결정문을 정부로 송달,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을 사실상 철회하는 내용의 법원 '강제조정안'을 수용

>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취하하고, 피고들은 이에 동의한다. 이후 상호 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원고와 피고들은 상호 간에 화합과 상생 및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정부와 사법부가 법치주의 훼손에 앞장섰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움.(19대 대선에서 구상금청구소송 철회, 사법처리 대상자 사면 공약)
- 구상권 청구 대상자 116명 중 강정마을 주민은 31명임. 사실상 전문 시위꾼들의 불법적 공사방해로 국민혈세가 심각하게 낭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상권 청구를 포기함, 전문 시위꾼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음.
- 더욱이 법원이 '이후 상호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못 박아 결국 공사지연 손해금 모두를 국민 혈세로 떠안게 되었음.

정무위원회

- 문재인 정부 고용참사 국민 눈속임용, 가짜 일자리 정책 고발
- 현 정부 정책 대응 능력의 총체적 부실
- 정권의 눈엣가시 인사에 대한 보복적 직권 남용 행위
- 전형적인 내로남불, 전방위 낙하산 인사 전횡
-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및 도덕적 해이

04 문재인 정부 고용참사 국민 눈속임용, 가짜 일자리 정책 고발

-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을 기반으로 한 소득주도성장은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 큰 위기 초래
  - 고용절벽, 가계부채 상승, 금리 인상, 부동산 문제, 공장가동률 저조 등 금융시스템 붕괴를 초래하는 상황임에도 관계기관은 현재 한계기업 수가 얼마나 되는지 현황파악조차 못하는 등 사태의 심각성 및 안일한 대응 질타
- 청와대, 국책연구기관까지 동원하는 생색내기용 단기 일자리 만들기
  - KDI 등 21개 기관 단기 알바 350명 채용 추진 (최대 2개월, 월 200만 원 급여)

  → 서민 청년에게는 단기 알바 일자리, 현 정부 캠코더 인사는 낙하산 특혜 자리
- 금융위·산업은행, 4차산업혁명 파트너 지원사업(17년 2조 원 추경) 성과 왜곡 지적, 전수조사 및 성과평가체계 재점검 등 제도개선 필요
  - 직원수 감소 기업이 발생하는 등 실제 고용 창출효과는 없음에도 일자리 창출과 매출실적 부풀리기 실적 허위 보고서 지적
- 현 정부 비정규직 제로 정책 부작용(공공기관 고용 세습 폐단)
  - 보훈복지의료공단 정규직 전환자 중 17명, 기업은행 15명, 금감원 6명, 신용보증기금 5명 등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 연관 실태 파악

  → 전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주장

05 현 정부 정책 대응 능력의 총체적 부실

- 법인 분리 강행 등 '한국GM 먹튀' 논란 대비 적절한 대응 부재
  - 국민 혈세 8,100억 원 투입에도 법인 분리시 비토권(거부권) 행사 등 안전장치 미비 등 속수무책
  - 산업은행이 지난 4월, GM과의 기본계약서 체결 논의 과정에서 GM의 R&D법인 분리 가능성을 예상했음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법인분리 이사회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등 지원만 하고 효과는 보지 못한 산업은행의 총체적 무능 지적
- 미 재무부의 국내 시중은행 컨퍼런스콜 은폐, 현 정부 대북완화 조치의 심각성 경종
  - 정부 당국, 미 재무부의 지난달 20~21일 국책은행인 산업·기업은행과 시중은행인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은행 등 모두 7개 은행과 전화회의(컨퍼런스콜) 감추기 급급
  - 대북제재 위반시 제재 가능성을 강조하려는 미국 측의 강력한 경고임에도 비공개로 처리하고 자세한 논의 내용은 국감장에서조차 자세히 알리지 않고 오해가 풀렸으니 문제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은폐 의혹 질타 및 보다 엄정한 대응방안 촉구

06 정권의 눈엣가시 인사에 대한 보복적 직권 남용 행위

- 한미연구소(USKI) 폐쇄 관련 청와대 보이지 않는 손 작동 의혹
  - 미국 내 전문가 네트워크이며 공공외교 안보 자산(현 정부 블랙리스트)의 일방적 폐쇄는 정권 이익을 위해 국익이 내팽개친 사건으로 강력 규탄
  - 존스홉킨스 대학 내 한미연구소(USKI)에 대해 회계부실이라는 지엽적인 이유를 들어 소장교체 등 예산지원 중단 과정에서의 청와대 과도한 개입 정황 고발

→ 대외경제연구원의 출장보고서('정책실장님이 알고 싶은 것은', '정책실장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는 비서관의 발언, 'VIP보고서 작성 검토' 등) 등 청와대 개입 정황 내부 자료 공개

- **국가보훈처 보복적·편향적 적폐청산 활동**
  -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 진상조사단 활동의 전 보훈처장 죽이기 등 편향적 활동 지적
  - 전 보훈처장 직무유기 혐의 검찰 무혐의 처분(6월) 불구, 법적 근거도 정당성도 없는 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를 구성하여 추가 조사 실시(8월), 먼지 털이식 조사는 전형적인 정치보복임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중단 요구

07 전형적인 내로남불, 전방위 낙하산 인사 전횡

- **집권여당의 여당 제 식구 만들기 위인설관 행태 고발**
  - 금융위, 공정위, 권익위에 신설된 정책전문관(정책전문위원), 여당 보좌관 출신 낙하산 임명 행태
- **금융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부적격 낙하산 실태**
  - 예탁원 산하 KS드림의 사장은 참여정부 당시 골프파동 등으로 사임한 전력이 있는 청와대비서관 출신으로, 해당분야 전문성도 부족한데 과도한 연봉을 받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공모절차도 없이 임명
  - 금융공공기관과 자회사의 이사와 감사, 금융회사 사외이사에 금감원 퇴직자, 전문성이 부족한 캠코더 인사 다수 임명

08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및 도덕적 해이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미비, 위원장 등 집행부 급여는 꼬박꼬박 집행
  - 7개월동안 위원회 구성도 완성하지 못하고 내년도 예산안 제출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급여만 계속 지급
  - → 국민과 세월호 유족, 여야 합의로 사회적 참사 특별법 제정 취지에 맞는 활동 재개 독려
- 금융공공기관의 과도한 복지 등 방만한 운영
  - 한국예탁결제원은 국토부의 승인안을 무시하고 오피스텔 100여채를 구입하여 직원에게 무상대여하고 있으며, 산업은행 등 일부 금융공공기관은 해외출장비용을 유관업체에게 부담시키게 하는 등 방만한 기관 운영 지적
  - 국민권익위의 해외출장건 경우 단순 MOU 협력, 정책협의, 간담회, 의견청취 등 권익위가 제시한 '공식적 행사로 인정되기 어려운 해외출장 사례'가 대부분이고 해외출장보고서도 부실한 내용이 상당수

기획재정위원회

- 소득주도성장의 실패, 잘못된 경제정책이 불러온 일자리 참사
- 고용 참사를 덮기 위한 청와대 주도의 일자리 분식(粉飾)
- 문재인 정권의 노골적인 금리 개입, 한국은행의 중립성 훼손
- 정권 맞춤형 통계 생산을 위해 국가통계의 신뢰 기반까지 뒤흔든 청와대
- 관세청의 정권코드 맞추기 식 수사
- 갈수록 심해지는 문 정부의 도덕적 해이
- 재정정보시스템의 허술한 보안 관리 및 의원 사찰 의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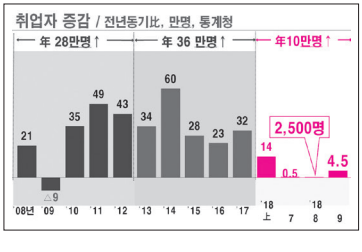
09 소득주도성장의 실패, 잘못된 경제정책이 불러온 일자리 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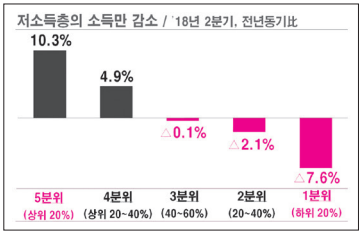
- 70년대 두 번의 오일쇼크와 97년 말 IMF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과거의 경제 위기는 모두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었으나 2018년 경제위기는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인한 내부적 요인에 기인

- MB 정부는 연 28만 명씩, 박근혜 정부는 연 36만 명씩 취업자 수가 증가한 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연 10만 명 수준으로 취업자 수가 급전직하

- 특히,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경비원과 청소용역 등에서 서민일자리 31.6만 개가 사라졌고 저소득층의 소득은 급격히 줄어들어 소득 양극화는 10년 이래 최악으로 '08년 금융위기 수준

-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야 한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으나,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소득주도성장은 개념 자체에 문제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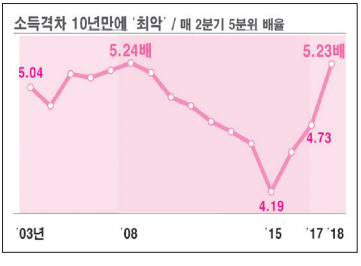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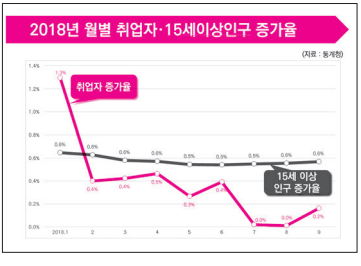
- 경제성장률 하향조정, 고용참사, 기업수익 악화, 국내자금 이탈 등 참담한 경제성적표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인구 탓, 날씨 탓, 前 정권 탓'만 하며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소득주도성장을 신봉하며 고용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음.

- 정부는 고용지표 악화 원인이 생산가능인구 감소라고 강변하나 실상은 15세 이상 인구 증가율은 완만한 반면 취업자 수만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음.

- 국가가 최대고용주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필요 이상의 공무원을 증원하고 원칙 없는 정규직 전환과 공공기관에 지시해 단기 일자리를 대량 양산하는 등의 행위는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고 국가재정을 낭비하는 배임행위에 해당

- 소득주도성장의 폐기와 함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소득주도성장 3인방(장하성, 김수현, 홍장표)의 사퇴 촉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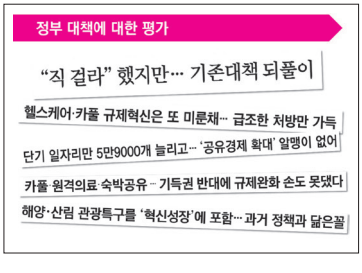


10 고용 참사를 덮기 위한 청와대 주도의 일자리 분식(粉飾)

-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 무리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고용지표가 계속 악화되자 기재부가 'BH 요청'으로 공공기관 360곳에 공문을 보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며 단기 일자리 창출을 강요
  - 이는 2~3개월, 길게는 6개월의 단기 일자리를 통해 반짝 성과를 올리고, 통계 흐름의 기저효과를 이용해 고용지표를 나아지게 하려는 분식용 일자리, 가짜 일자리에 불과

- 5.9만 개의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는 내용에 있어서도 형편없어 경력으로 활용하기도 어려우며 공공부문에서 일하길 원하는 청년들의 취업 의지를 악용해 세금으로 단기간에 고용통계를 개선시키려는 국민 기만행위
  - 청와대 지시로 졸속으로 만들어진 일자리의 면면을 보면 고속도로 풀 뽑기, 철도역에서 짐 들어주기, 신혼부부 주택물색 도우미, 국립대학 빈 강의실 돌아다니며 소등하기, 전통시장 환경 미화 및 화재 감시에 수천 명의 인원을 투입. 현재도 이미 용역을 주고 있거나 기술 개발로 센서를 통한 소등, 화재감시센서 구축 등이 이루어진 상황

- 가뜩이나 부채가 많은 방만한 공공기관에 수요도, 필요성도 없는 일자리를 만들라고 강요하는 것은 더 많은 빚을 내 가짜일자리를 만들어내라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을 조장하는 기재부와 이런 일자리를 만드는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는 국고 손실과 업무상 배임행위 법적 책임을 물을 것


정부 대책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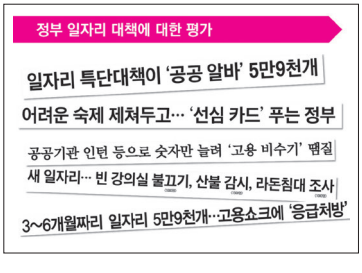
"직 걸라" 했지만… 기존대책 되풀이

헬스케어·카풀 규제혁신은 또 미룬채… 급조한 처방만 가득

단기 일자리만 5만9000개 늘리고… '공유경제 확대' 알맹이 없어

카풀 원격의료·숙박공유 … 기득권 반대에 규제완화 손도 못댔다

해양·산림 관광특구를 '혁신성장'에 포함… 과거 정책과 닮은꼴


정부 일자리 대책에 대한 평가

일자리 특단대책이 '공공 알바' 5만9천개

어려운 숙제 제쳐두고… '선심 카드' 푸는 정부

공공기관 인턴 등으로 숫자만 늘려 '고용 비수기' 땜질

새 일자리… 빈 강의실 불끄기, 산불 감시, 라돈침대 조사

3~6개월짜리 일자리 5만9천개…고용쇼크에 '응급처방'

11 문재인 정권의 노골적인 금리 개입, 한국은행의 중립성 훼손

- 이낙연 국무총리, 김현미 국토부장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권 인사가 언론을 통해 노골적으로 한은에 금리 인상을 압박. 이는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그 책임을 한은에 전가하려는 의도

-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도 지난해 4차례의 금리 인상을 주장, 이로 인해 채권가치 2.1조 원 증발
  - 김수현 靑 사회수석이 사회정책비서관이었던 2006년 11월 금통위 개최 3일 전 이성태 한은 총재를 방문해 논란이 되었으나 소신대로 금리를 동결해 한은의 중립성을 지켜낸 전례가 있다고 강조

- 가계부채가 아닌 부동산 가격, 특히 강남 집값을 통화정책과 직접 연계시키는 것은 맞지 않는 접근. 금리정책은 재정정책과 달리 무차별적이어서 부동산 중심의 금융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사용하면 거시경제 전반의 큰 부담이 되고, 잘못하면 디플레이션으로 가게 된다고 경고

- 한미 금리차는 2007년 이래 가장 크고, 가계부채는 1500조에 이르며, 국내경기도 좋지 않아 한은이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평가도 있고 이미 실기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음.
  - 최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떠나는 것은 물론이고 증시를 떠받치고 있던 연기금마저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고 있다며 우려
  - 근래 한국 증시가 IMF체제 하의 아르헨티나보다 더 폭락한 것은 글로벌 마켓 플레이어들이 한국경제를 좋지 않게 보고 투자를 꺼리는 것으로 부총리와 한은이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부터 제대로 해야 진단과 솔루션이 나온다고 지적

금리인상 압박하는 내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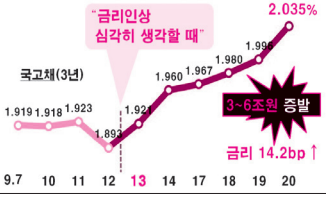
"금리 인상 문제 좀 더 심각히 생각할 때"

"금리 인하가 '빚내서 집 사자' 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었고 가계부채 증가를 가져 온 것은 사실" / 9.13 국회 본회의 답변

"금리 인상 문제에 전향적인 고민이 필요"

"저금리 정책에 의한 시중 유동성 과잉이 집값 폭등의 가장 큰 이유"/ 10.2 국회 답변

국무총리 말 한마디에 채권 금리 5영업일 연속 수직상승



與 금통위 당일(10.18)까지 금리인상 압박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책조정회의
(10.18)

수 년째 이어진 초저금리로 시중에 유동자금 급증하고 있어 대응 필요해. 집값 폭등도 오갈 데 없는 돈이 부동산 시장에 급격히 몰렸기 때문. 경기위축,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 미국과의 금리역전에 따른 자금유출 등 고민할 게 많다. 통화당국의 현명한 금리결정 기대한다.

새 정부 최고위 관료들의 금리압박에 대한 언론의 평가

- □ 韓銀에 금리 압박… 與圈의 '내로남불' 〈조선〉
- □ 이낙연 총리 압박성 발언에 채권금리 급등 〈중앙〉
- □ 韓銀, 금리는 정치 아닌 경제논리로 결정해야 〈동아〉
- □ 마음 급했나… 李총리 금리인상 발언 논란 〈매경〉
- □ 어쩌려고 금리 흔드나, 금리결정 공신력 추락 〈한경〉
- □ 韓銀 독립성 침해…집값 정책 '측면 지원'인가 〈서경〉
- □ 총리가 왜 중앙은행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나 〈세계〉

12 정권 맞춤형 통계 생산을 위해 국가통계의 신뢰기반까지 뒤흔든 청와대

- 통계 논란으로 1990년 개청 이래 28년 만에 실시된 첫 단독 국감
-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통계, 잇따른 통계청장 경질과 코드 인사
  - 청와대는 5월 24일, 1/4분기 가계소득조사 결과 소득분배가 악화되자 25일 통계청이 아닌 보건사회연구원의 강신욱 연구원에게 요청해 27일 보고서를 받았고, 이는 29일 文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발표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함. 이 보고서는 소득불평등 악화 원인을 통계청 조사방식 문제로 돌림.
  - 지난 8월 23일,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소득분배가 최악의 수준으로 나오자 청와대는 26일 황수경 통계청장을 전격 경질하고 28일 통계조사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한 보사연 연구원을 신임 청장으로 임명
- 신임 통계청장의 자질 논란
  - 마르크스주의에 동조하는 박사학위 논문, 2006년 한미 FTA협상 반대 등 특정 이념에 편향되고 정치색이 강한 신임 청장이 과연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국가통계생산기관의 수장으로서 적절한지 의문
  - 강 청장은 통계청장 취임식 전날인 8.27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배석해 "장관님들의 정책에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는 발언을 해 코드 인사 논란을 자초
- 청와대의 소득주도성장 홍보 수단으로 전락한 가계동향조사
  -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주장으로 2년 전 폐지됐던 가계동향조사가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의 당위성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부활
  - 학계, 언론에서도 이번 개편안은 양극단은 과소 반영되고 중위층은 과다 반영되어 샘플상 결과가 개선될 수 있으나 제대로 된 소득 파악이 어려워 정확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며 부정적 반응
  - 통계청 조사는 시의성 보다는 '정확성'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결국 행정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년도 가계동향조사에 총 16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소득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국민혈세 낭비

13 관세청의 정권코드 맞추기 식 수사

- 관세청장,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인정
  - 한진그룹 총수 일가를 14번 포토라인에 세우고, 18차례 압수수색을 하고, 5번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
  - 수사에 착수하기도 전에 관세청장이 전면에 나서 '반드시 처벌하겠다'며 실시간 언론에 피의사실을 공표했으나 조사는 6개월이 넘도록 지지부진
  - 드루킹 사건으로 국민 여론이 안 좋아지니 여권에서 한진 일가 밀수 의혹으로 물타기를 한 것이라고 비판
- 반면, 유난히 소극적인 북한 석탄의 국내 반입 수사. 숨기는 데만 급급
  - 관세청이 올해 8월 북한산 석탄이 국내 반입되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조사 발표 당시 추가 2곳에 대한 수사 사실은 알리지 않아 은폐 의혹 제기
  - 원산지를 러시아산으로 속이는 등 명백한 사문서 위조 혐의가 있음에도 통관보류를 해제하고 물건을 돌려준 것은 제3의 기관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 사문서 위조, 밀수, 관세법 및 특가법 위반 등 무거운 혐의를 적용해놓고 세관의 구속수사 의견을 무시하고 불구속 수사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 제기
  - 관세청장, 청와대가 민감해하는 북한석탄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며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
- 관세청의 부실한 수사 행태와 말 바꾸기
  - 북한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돼 국내로 들어왔을 때 물품대금으로 현물이 지급됐다고 주장했던 관세청, 두 달 만에 말을 바꿔 석탄 대금이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됐으나 북한으로 건너갔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변명

14 갈수록 심해지는 문 정부의 도덕적 해이

- 청와대 행정관들의 업무추진비가 심야시간대와 휴일동안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등에서 부적절하게 사용되었고, 임용되기도 전에 회의참석 수당을 정책자문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남
- 국세청 퇴직 공무원들은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김앤장·율촌·세종 등 대형 법무법인의 위장계열사인 세무법인에 들어가 전관예우를 받음. 국세청장에게 퇴임 고위직의 대기업 또는 대형 법무법인 계열사로의 탈법적 취업을 막을 제도개선 방안 마련 촉구
- 공공건설사업 입찰 평가를 담당한 조달청 공무원들과 민간건설사에 재취업한 퇴직 관료들이 서로 내통하면서 특정 건설사들이 관급공사를 독식. 조달 마피아들이 주도하는 현행 기술제안 입찰 평가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필요

15 재정정보시스템의 허술한 보안 관리 및 의원 사찰 의혹

- 심재철 의원이 재정정보시스템에서 얻은 자료로 청와대 행정관들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 지적하자 청와대가 이를 불법적인 재정정보 유출로 규정. 청와대의 도덕성 문제에서 한 의원의 비인가 자료 획득 문제로 본질을 호도

- 의원 및 보좌진에 대한 정부의 검찰 고발, 전례 없는 압수수색, 여당 의원들의 국감 방해활동 등에 대해 강력 규탄

- 정상적으로 ID를 부여받아 접근했고, 안내에 따라 백스페이스 두 번을 누른 것을 두고 해킹이니, 국가기밀 탈취로 몰아가는 것은 의회의 정상적인 국감 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부실 관리의 책임을 개인 의원에게 전가시키는 것
  - OLAP은 국회 등 1,400명이 일반 아이디로 다 들어갈 수 있음. 비밀자료라면 보안규정에 따라 암호화 되어 있거나 출력 시 비밀등급이 자동 표시되어야 하며, 비인가영역이라고 하면 접근이 차단되거나 경고창이 떠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으며 프로그램 오류를 실무자들도 인정

- 재정정보원장, 재정분석시스템에서 비인가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사과. 시스템을 보안 관리를 잘못한 재정정보원장의 사퇴 촉구

- 김동연 부총리가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심 의원의 국회 부의장 시절 해외출장 중 유류비를 사용한 것을 언급한 것은 심 의원이 어떤 것을 공개할지에 따라 맞춰서 대응하려고 미리 조사한 것으로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
  - 부총리는 재정정보원이 정보 관리를 허술하게 한 것에 대해 조사하고, 관리를 더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문제되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제도 개선을 먼저 하는 것이 타당
  - 부총리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내역을 사찰한 것은 권한 밖의 행위로 명백한 의회파괴 행위이자, 정부의 부당한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를 지적하는 야당 의원의 입을 받기 위한 불법적 행태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

교육위원회

- 문재인 정부의 연이은 무자격 교육수장 임명강행
- 오락가락 교육정책, 철학 없는 교육수장
- 좌파교육감들의 초법적 전교조 감싸기
- 문재인 정부 교육기관장들의 좌편향 역사인식
- 문재인표 청년우롱 단기일자리 창출은 대표적인 청년기만, 세금낭비 정책
- 학교 밖 청소년 묻지마 현금지원 정책
- 상도유치원 붕괴 대책 등 학교시설안전 및 실질적 학생 복지 정책제안
- 문재인 정부의 교육계 캠코더 인사

16 문재인 정부의 연이은 무자격 교육수장 임명강행

- 표절장관 김상곤*에 이어 위장전입 및 현행법 위반의혹으로 청문보고서도 채택되지 않았으며, 임명철회 국민청원이 8만에 육박했던 유은혜 장관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강행 함으로써 국회와 국민 무시

※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표절 의혹 김상곤 석사논문에서 연구 부적절 행위 결론(18.5)

- 당은 유은혜 장관 임명강행에 대한 항의 및 무자격 장관이라는 결론하에 장관의 증인선거 거부 및 국정감사 기간 동안 차관을 상대로 질의

※ 유은혜 장관 현행법 위반 의혹

- 자녀 학교 문제로 종교시설에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 위반
- 휴일 지역구 기자간담회 허위신고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 우석대 허위경력 의혹
- 피감기관 건물에 사무실 임차한 갑질 의혹
- 남편 사업체 사내이사를 보좌진으로 채용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의혹

※ 우석대 강사 허위경력 의혹 관련

-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비롯하여 여당 관계자등이 실제 강의기간과 재직기간이 불일치하는 등 우석대 강사 경력관련 의혹이 다수 제기
- 우석대의 강사관리 및 경력 등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감사를 촉구하고 차관의 감사 실시 답변을 받아냄.

17 오락가락 교육정책, 철학 없는 교육수장

- 유치원 영어방과후 금지 정책 번복
  - 정부·여당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입장이 여론의 뭇매를 맞자 정책시행을 1년 유예하기로 결정(17.12)
  - 유은혜 장관은 취임 2일 만에 본인의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 반대 입장을 번복하고 유치원 영어방과후 교육 실시 허용을 발표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 부재, 오락가락 교육정책의 민낯을 보여준 대표적인 정책무능 사례
  - 특히, 정부는 당초 정책숙려제를 거쳐 허용여부를 결정키로 하였으나 장관임명 직후 신임 장관이 일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정책숙려제' 또한 무용지물임을 확인

- 설익은 고교무상교육, 실시 시기는 오락가락!
  - 장관 취임 직후 재정 고려 없는 졸속적인 고교무상교육 정책 발표 ▲재정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전무 ▲재정당국과 협의 전무 ▲이미 내년도('19)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상황에서 2019년도부터 고교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발표

※ 문재인 정부의 고교무상교육 말 바꾸기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 2020년 1학기부터 시작, 2022년 全 학교 확대
- 유은혜 장관 취임사(2018.10.2.) : 2019년부터 실시
- 유은혜 장관 기자회견(2018.10.10.) : 내년 2학기 시행

18 좌파교육감들의 초법적 전교조 감싸기

- 전북,전남,울산,경남,부산,광주,세종,제주 교육감의 전교조 감싸기 행태
  - 전교조전임자 불법휴직을 용인함으로써 현행법 위반을 조장
  - 인천교육청, 직위 해제된 전교조 교사 4명 대법확정판결 前 복직 발령으로 불법 조장
  - 경남의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이란 이름으로 학생들을 협의체에 넣어 교사와의 갈등을 부추기고 학교현장 정치화를 조장
- 태풍 비상상황에서 학생안전보다 전교조 지키기가 더 중요한 교육감들
  - 태풍 '솔릭'으로 국가적인 재난대비 비상상황(8.22~24)에서 5명의 교육감*이 상경하여 청와대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기자회견'을 실시(8.23, 14시, 청와대 앞)

※ 조희연(서울), 민병희(강원), 김지철(충남), 김승환(전북), 최교진(세종) 교육감

19 문재인 정부 교육기관장들의 좌편향 역사인식

-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냐? 라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조광 역사편찬위원장
- 서울시교육청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서울본부'와 공동 주최한 <2018 서울지역 학생 평화통일! 골든벨> 좌편향 친북적 행사 내용 집중 질타하며 향후 이념편향적 행사 중단 촉구
  -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7기 임원 중 8명은 이적단체로 판명받은 범민련 출신

- 행사 지정 도서인 <개성공단 사람들>의 친북적 내용
  - 6.25전쟁이 남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통일전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등 북한의 입장에서 봐야한다는 관점 소개
  - 통진당 해산 비판, 개성공단에 대한 '퍼주기' 담론은 왜곡

- **전북 교육청의 역사보조교재의 심각한 이념편향성과 이념교육을 위한 세금투입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정책추진 재고 촉구**
  - 집필진의 77%가 좌편향인사
  - 자유민주주의 언급 없고, 6.25남침은 없거나 부실한 서술로 일관. 북한 군사 도발이나 북한 인권에 대한 언급도 부실
  - 4억4천4백만의 국민세금을 좌편향 역사교육에 투입

20 문재인표 청년우롱 단기일자리 창출은 대표적인 청년 기만, 세금낭비 정책

- **교육부에서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총 1,236개 일자리의 실체는 국립대 학생 대상으로 "빈 강의실 적정온도 유지, 난방 중 문개방 여부, 공실 소등 등 점검"에 1000명이 배정되었으며, 예산은 8억 4천 오백만 원임.**
  - 고등교육을 받은 대학생에게 실생활의 기본사항인 소등점검 등을 단기일자리로 둔갑시켜 수억의 억지예산을 책정. 문재인 교육부의 대표적인 국민기만, 세금낭비 정책
  - 문재인 정부의 청년일자리 창출은 공염불이며, 향후 청년고용률 또한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

21 학교 밖 청소년 묻지마 현금지원 정책

-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에게 증빙이 필요없는 20만 원씩 현금살포 정책 추진을 졸속 발표(2019. 10)
  - 학교 밖 청소년 정책은 여가부 소관사항이나 서울시는 여가부와 전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인기영합적 현금살포 정책 발표
  - 여가부는 지원정책은 학교 안으로 유인하는 동인이어야 한다는 명확한 원칙을 제시. 여가부의 '내일이룸학교' 사업에 이미 지원금이 있는 바,
  - 서울교육청의 정책은 원칙도 목표도 없는 중복지원 정책이며, 대표적인 정부부처와 교육청간의 불통 및 정책엇박자 사례임을 확인

22 상도유치원 붕괴 대책 등 학교시설안전 및 실질적 학생 복지 정책제안

- 상도유치원 학부모 대표단을 당 차원에서 참고인 채택하여 생생한 현장 목소리 청취 및 서울시 교육청과 동작구청의 무책임과 시설 안전 대응 미비 강력 질타

  ※ 한국당 교육위원 전원, 상도유치원 학부모 대표단과 간담회 실시 및 건의사항 청취

- 대학생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장학재단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안
  - 대학생 대상의 허위매물 피해 사례 급증, 기숙사 증축은 고비용 문제와 지역민간의 갈등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보증금만 있으면 학생의 주거가 달라지는 점 지적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의 적극적인 실행방안 마련 검토 답변

23 문재인 정부의 교육계 캠코더 인사

- 2018년 10월 10일 현재 기준, 교육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의 전체 임명직 임원 231명 중 무려 47명(약 20%)이 '캠코더'의혹 인사
- 국립대병원 상임감사 64%, 이사 12% 캠코더 인사

□ 교육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30개) 캠코더 의혹인사 요약

(18.10.10 기준)

전체 임명직 임원	캠코더 의혹 임원 수	비율
231	47	20%

□ 교육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30개) 캠코더 의혹인사 선출유형별 현황

(18.10.10 기준)

구분	인원 수	비율
노무현정부	13	28%
문재인캠프	7	15%
더불어민주당	7	15%
코드인사	20	42%
합계	47	1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민주노총과 합작해 공영방송 장악
- 재앙적 탈원전 추진
- 정권과 네이버의 유착 의혹... 제2의 드루킹 사태에 무방비
- 가짜뉴스 빌미로 비판여론 재갈 물리기
- 포털의 '뉴스 갑질' '사이버 갑질' 수수방관
- 가계통신비 부담에 속수무책
- 국가미래 포기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예산 삭감
- 가짜 일자리에 혈세 낭비
- 4차 산업혁명 발목잡기 : 사이버 보안 허점과 공인인증서
- 탈핵 시민단체가 원안위 장악... '라돈 사태' 우왕좌왕

24 민주노총과 합작해 공영방송 장악

- 양대 공영방송 KBS 사장, MBC 사장이 모두 민주노총 노조위원장 출신
  - MBC 문화방송 사장 이하 고위직 100% 민주노총 노조원 출신 편향인사
  - 민주노총 강령 규약을 그대로 반영한 산별노조 협약 체결로, 방송사의 경영권 침해 (※방송법 6조 위반 소지)
  - 시청자위원회에 노조참여 의무화해 노영방송 가속화
- 민노총에 의해 장악된 KBS·MBC 사측 모두 직원 개인 이메일 불법 사찰 의혹
-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메인뉴스 2만6,581건 보도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 문대통령과 북한을 가장 많이 언급한 것으로 확인
  - 땡문뉴스·편파방송 심각
- KBS <저널리즘 토크쇼 J> 등 어용 방송프로그램을 이용해, 정부여당 편향적인 편파방송 자행
  - 북한 미화, 보수 정치인 조롱, 정부정책 일방적 옹호 내용이 여과없이 방영
  - 방송내용 심의권한이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까지 장악해 편파 방송에 면죄부 부여

25 재앙적 탈원전 추진

- 탈원전 정책 위해 '강정민'을 강행했다가 원안위법 위반에 따른 결격사유 들통나 자진 사퇴

- 초헌법적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 조기 폐쇄의 근거로 마련한 <한국수력원자역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용역 보고서>의 판매단가 수치 조작·왜곡
  - 한수원은 원자력 판매단가를 원가(53원)보다 낮은 51원으로 책정해 매출 850억 원으로 축소한 후, 이를 근거로 '경제성 없다' 판단
  - 한수원은 지역수용성 평가도 실시하지 않고 시행했다고 위증
  - 월성 1호기 정기검사 일정을 고의로 지연시켜 조기폐쇄에 일조
  - 즉, 초법·불법·탈법을 총동원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강행
- 반면, 태양광 투자 설비 관련 보고는 현실에 맞지 않는 낮은 비용을 산정하고, 외부비용을 미반영함으로써 발전원가를 낮추는 꼼수 자행

26 정권과 네이버의 유착 의혹... 제2의 드루킹 사태에 무방비

-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드루킹 일당에 의해 자행된 네이버 뉴스 댓글 '매크로 조작'을 네이버가 알면서도 묵인·방조한 의혹이 있음.
  - 당시 뉴스 서비스 총책임자였던 윤영찬 네이버 부사장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영전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 의심 가능
- 게다가 드루킹 사건 이후에도 네이버 측은 이렇다 할 자정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음.
  - 감독 책임이 있는 과기부 방통위 역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
- 드루킹 사건은 정권과 유착한 포털 사이트가 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국민여론을 조작한 新 정경 유착, 新 정언 유착 사례
  - 그 전모가 확실히 드러날 때까지 끝까지 추적해야 할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임.

27 가짜뉴스 빌미로 비판여론 재갈 물리기

- 문재인 정부가 10월 8일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책을 국무회의에서 발표하기로 해 놓고 돌연 연기했으며, 보완책 마련 후 다시 발표 예정
  - 당초 계획에는 방통위와 법무부, 교육부, 과기부, 문광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을 총동원하는 내용 포함
  - 좌파언론이 대대적인 가짜뉴스 관련 보도로 분위기를 띄우고, 정권이 발맞추는 형국
- 정부가 권력기관을 동원해 가짜뉴스를 판단하겠다는 것은 초법적인 발상
  - 문재인 정부의 가짜뉴스 대책이 비판세력 탄압용이라는 의구심 초래
-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뉴스와 관련한 규제의 타당성 연구 결과를 받아보기도 전에 '범정부 대책'부터 만든 것으로 확인됨.
  - 이는 법으로 보장하는 방통위의 독립성을 스스로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 충분함.

28 포털의 '뉴스 갑질' '사이버 갑질' 수수방관

- 정권을 등에 업은 네이버 다음 등 거대 포털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플랫폼 중립성을 위반하고, 뉴스 여론 조작 및 사이버 골목 상권에 대한 갑질을 무소불위로 자행
  - 관련 부서는 수수방관으로 일관
- 거대 포털들이 뉴스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공론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데 따른 폐해가 자심

- 가짜 뉴스가 넘쳐나고 인기 검색어 순위 조작, 댓글 공작 등을 통한 여론 왜곡' 조작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음.
- 댓글 공작 뿐만 아니라 인기 검색어 순위 조작 의혹도 뚜렷

• 포털은 법적으로 뉴스 유통 사업자일 뿐인데 뉴스 선별, 편집, 배치 등을 통해 어젠다를 설정해 트래픽을 높이고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 기형적이고 무책임한 운영구조를 고수

- 그 과정에서 사이버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 유발 중

29 가계통신비 부담에 속수무책

• 문재인 정부는 늘어나는 가계통신비 부담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보편요금제'라는 시장 역행적인 방안만 앵무새처럼 되풀이

• 참여연대 등 어용 시민단체들은 가계 통신비 추가 인하를 요구하여 보편요금제 도입 및 선택약정할인율 확대를 위한 압력 행사

- 이에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잇단 통신비 인하 여파로 영업이익률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요구는 기업 생존을 위협한다고 반발하는 상황

•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보편요금제 도입은 통신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탁상행정의 전형

- 기존의 알뜰폰 시장을 고사시킬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통신시장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장기적으로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늘릴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임.

30 국가미래 포기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예산 삭감

-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 백년지계를 위해 시작된 국책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을 문재인 정권에서 대폭 삭감
- 내년도 정부 예산안 기준 1,753억 원 삭감
  - 7개의 연구단을 위한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2차 건립에 대한 당초의 계획에 차질 예상
  - 25개의 연구단을 위한 캠퍼스 연구단 건립 사업도 당초 계획상 2021년에 완료되어야 하는데 차질이 불가피
  - 내년도 기초연구지원액도 현재 1개 연구단별 평균 지원금액이 약 73억 원에서 65억 원으로 감액될 예정
- 문재인 정권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예산 삭감은 과학 무시이자 충청권 무시 행태

31 가짜 일자리에 혈세 낭비

- 과기부 장관이 세금으로 두 달 알바 채용해 고용지표 마이너스를 막으려 한다는 의혹을 인지, 기재부가 공공지관에 '두 달짜리 단기 일자리 만들어라'는 내용의 긴급지침을 내린 사실이 적발됨.
  - 과기부 장관은 의혹을 부인하다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자 알바 채용계획 시인
  - 국감 기간 중 전 상임위 통해 '단기 가짜 일자리 문제'가 국민 앞에 폭로됨.
- 과기정통부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두 달 단기 일자리에 500명을 뽑기로 결정
  -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없이 국민혈세 19억 원 낭비

-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수행 중인 <신진 석박사 채용사업>은 연구원들에게 월급 상납 강요하는 '나쁜 일자리'로 변질
  - 한 기업의 경우 석사 연구원은 1,000만 원, 박사 연구원은 600만 원을 채용된 기업 대표에게 상납한 사례 적발

32 4차 산업혁명 발목잡기 : 사이버 보안 허점과 공인인증서

- 위조 실리콘 지문으로 스마트폰 결제페이 다 뚫리는 사이버 보안 체계 전방이 허점투성이임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실상조차 파악 못 해
  - 뿐만 아니라 어둠의 구글, 사물인터넷(IoT) 검색엔진 '쇼단'에 국내 IoT기기 취약점이 그대로 노출
  - 해외 발신번호를 국내 번호로 조작 가능하게 하는 SIM 박스 관련 제제가 없어 보이스피싱의 통로가 되기도
- 과기부는 공인인증서 폐지 취지로 <전자서명법 개정안> 발의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눈 가리고 아웅 방식
  - 공공부문에선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방식을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공인증서를 계속 사용해야 하는 상황 초래
  - 실지명의를 확보할 수 없는 대부분의 인증보안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

33 탈핵 시민단체가 원안위 장악... '라돈 사태' 우왕좌왕

-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등에 업고, 탈핵 성향의 각종 시민단체 출신들이 원자력계 요직을 장악
  - 신고리 공론화 과정에서 탈핵 대표였던 강정민씨가 원자력안전 위원장으로 임명됐으며, 녹색연합 출신 석광훈 위원은 한국안전기술원 감사로 선임
  - 차기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내정설이 도는 김혜정 원안위원 역시 대표적인 탈핵인사
- 편향된 시각을 가진 비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해, 본연의 기능인 원자력 안전성을 오히려 저해하는 결과 초래
- 그 결과 '라돈 침대' 사태에 이어 '라돈 대리석' '라돈 아파트' 등 생활방사선 관련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나 원안위는 손 놓고 있는 상태
  - 원자력안전재단이 보유한 라돈측정기는 전국에 단 10대뿐인 실정

외교통일위원회

- 평양선언, 남북군사합의서 셀프비준으로 위헌 논란 야기
- 대북제재 완화 전도사 자처한 이번 유럽순방 최대 성과는 국내에서 잊혀진 북한인권문제와 CVID를 확인한 것뿐
- '5.24 조치 해제' 기정사실화 꼼수부리다 논란만 야기
- 북한 석탄 수입 관련 관세청의 거짓말과 정부의 직무유기
- 교황 방북 성사된 듯 자화자찬 호들갑 떤 정부의 후안무치
- 개성연락사무소 개보수 비용 뻥튀기로 드러난 남북 협력기금의 제도적 문제점
- '냉면이 목구녕으로 넘어갑네까' 대북 저자세 태도로 국민 자존심 짓밟고 북한에게 끌려 다니는 정부
- 철도 연결 등 남북경협 가속운전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대북제재 이행 여지 의심 받아
- 탈북민 출신 기자 취재배제 방침 고수하는 인권 유린 통일부 장관
- 판문점선언, 평양선언,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을 두고 오락가락 입맛대로 해석하는 정부의 위헌적 태도

34 평양선언, 남북군사합의서 셀프비준으로 위헌논란 야기

- 9.11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상임위 상정도 되기 전에 후속 합의서인 평양선언, 남북군사합의서 국무회의에서 셀프비준하고 공포

> -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4.29)
> -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9.11)
> - 「9월 평양선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군사분야합의서」 체결 (9.19)
> - 「9월 평양선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군사분야합의서」 국무회의 심의·의결 (10.24) ⇒ 셀프비준
> - 「9월 평양선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군사분야합의서」 관보 게재 ⇒ 공포

- 헌법 제60조에서는 국회의 안전보장, 주권제약, 중대한 재정부담 관련한 조약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서 헌법 제60조에 해당하지 않고, 남북합의서는 남북관계발전법에 의해 대통령의 셀프비준이 가능하다는 궤변으로 위헌논란을 자초함.
- 법리논쟁, 형식론에 매몰시켜 불필요한 정치적 공방 속에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 남북합의서가 가진 본질적 문제점인 '무장해제, 안보포기'를 감추려 함.

35 대북제재 완화 전도사 자처한 이번 유럽순방 최대 성과는 국내에서 잊혀진 북한인권문제와 CVID를 확인한 것뿐

- 마크롱 佛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했으나 돌아온 마크롱 대통령의 대답은 CVID 고수, EU 의장과의 회담에서 역시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했으나 결과는 EU는 UN대북제재결의 전면 이행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을 뿐
  - 국가 간의 정상외교에서 있을 수 없는 '면전박대'로 사상초유의 역대급 외교참사임을 지적
-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대북제재 강화와 완전한 이행만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한다고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문재인 대통령만 홀로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 국익을 위한 외교가 아닌 '북한을 위한 외교, 왕따 외교'를 자행하는 것
  - 대북 독자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의 대북기조와는 반대로 국제외교 무대에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속화시킬 뿐

36 '5.24 조치 해제' 기정사실화 꼼수부리다 논란만 야기

- UN대북제재가 아닌 우리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인 5.24조치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지 못해 조속히 5.24조치 해제가 필요하다는 여당 의원의 유도성 질의에 '해제 검토 중'이라는 강경화 장관의 답변으로 5.24조치 해제 관련 여야공방이 일어남.
  - 5.24조치는 천안함 폭침 사태로 촉발된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로 주무부처인 통일부 장관도 언급한 적 없는 주요 사항을 외교부 장관이 부적절하게 언급했다고 질타
  -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 없이 성급하게 5.24조치 해제를 운운한 것은

유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아니며, 故 박왕자 씨에 대한 공식 사과도 없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없다는 지적에 부적절한 답변에 대한 장관의 공식 사과를 받아냄.

- 5.24 조치 해제를 기정사실화하려는 강경화 장관의 부적절한 답변 자체에 대한 취소를 강력히 요구해 장관의 사과와 발언 수정을 얻어냄.

37 북한 석탄 수입 관련 관세청의 거짓말과 정부의 직무유기

- 김영문 관세청장 증인 심문을 통해 관세청 통관절차를 거쳐 수입된 북한산 석탄 대금이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제3자에게 송금된 사실을 밝혀내 그간 송금 사실을 전면 부인하던 관세청이 거짓 해명을 해 온 사실을 밝혀냄.
  - 최초 송금 시점인 17년 4월 이후 10월에 재차 송금된 사실을 확인하여 미국 정보기관의 정보제공이 있은 이후의 시점에도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불법행위가 방조 된 것을 질타
  - 우리 금융기관이 석탄 대금 송금에 이용된 것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중대사안으로서 美 재무부가 우리 금융기관 7곳과 컨퍼런스콜을 통해 구두 경고한 것이 이 사실과 무관하지 않음을 지적
  - 진실을 숨기기에 급급한 관세청 등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강하게 질타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

38 교황 방북 성사된 듯 자화자찬 호들갑 떤 정부의 후안무치

- 로마 교황청 공식방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면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방북을 제안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직후 교황이 '갈 수 있다'고 답변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사실은 'I can go'의 답변이 아닌 'available'이라고 답변한 사실이 밝혀짐.

- 면담에서 통역을 맡았던 한현택 신부는 교황이 'available'에 해당하는 이탈리아어를 사용했다고 확인해 줌.
- 'available'은 가능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표현한 것이 아니냐는 유기준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 통역관 출신의 강경화 장관이 '그렇다'며 '교황이 실제 방북하는 것은 교황청의 검토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답변하여 방북이 최종 성사된 것이 아님을 확인함.
- 유럽 순방에서 교황 방북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것을 이번 순방의 주요 성과로 홍보한 정부의 이중적이고 후안무치한 태도가 확인됨.

39 개성연락사무소 개보수 비용 뻥튀기로 드러난 남북협력기금의 제도적 문제점

- 7.17 개성연락사무소 개보수 비용으로 8600만 원을 의결한 뒤, 10.24에 97억 8000만 원을 추가 의결한 것은 개보수에 과다한 예산이 집행된 것임은 물론, 교추협의 예산 심의 의결 절차가 겉핥기식 졸속 심의임을 지적하고 교추협위원 구성 방식 개선을 요구
  - 97억 원의 세부내역이 포함된 자료 제출 요구에 통일부가 제출 회피를 지속하자 UN대북제재로 대북 반입이 금지된 품목이 포함된 것이 아니냐는 추궁에 '연락소 성격상 보안시설이 포함되어 있음'을 시인함.
  - 연락사무소는 영사 성격을 띄는 시설물로서 대북제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자의적 판단에 완공해놓고, 반입 품목이 공개되면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궤변으로 국회의 예산심의권, 국정감사권을 침해함.
- 1조가 넘는 기금을 운영하는 교추협이 편향된 인사로 구성되어 회의 한번 제대로 않고 서면으로 졸속 심의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구성과 운영 모두 문제가 있어 조속한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함.

40 '냉면이 목구녕으로 넘어갑네까' 대북 저자세 태도로 국민 자존심 짓밟고 북한에게 끌려 다니는 정부

- 조명균 장관이 북한의 카운터파트인 리선권 北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반복된 무례와 결례에 대해 제대로 항의하기는커녕 허리를 숙여 사과를 하는 등 지나치게 저자세로 임해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음.
  - 리선권이 9.19 평양 남북정상회담 환영 만찬에서 옥류관 평양냉면을 먹고 있는 대기업 총수들의 테이블로 다가와 "지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고 발언한 것이 국감에서 정진석 의원의 질의로 밝혀짐.
  - 조명균 장관이 회담에 3분 늦게 도착한 것을 해명하며 '시계가 고장 났다'고 표현한 것을 리선권이 '시계도 주인을 닮았다'라고 응수한 것 역시 리선권에 대한 조 장관의 저자세를 여실히 드러냄.
  - 리선권의 반복된 무례와 결례에 제대로 항의조차 못 하는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끌려다니며 밀리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

41 철도 연결 등 남북경협 가속운전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대북제재 이행 여지 의심 받아

- 유엔사의 불허로 남북공동 조사가 2차례 연속 연기되고,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은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대북제재 면제 신청을 하는 등 대북제재 이행을 두고 오락가락 태도를 보임.
  - 남북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해 8월 한 달간 186톤의 석유류가 북에 반입된 것이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질의에 비공개로 대북제재 면제 신청을 한 것이라 답변함.
  - 개성연락사무소 개보수를 위해 반입된 물자의 세부내역이 공개되면 불필요한 오해(대북제재 위반 여지 등)를 살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하는 등
  - 북한과 가까워지는 속도만큼 대북제재를 강조하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 멀어질 우려 제기

- 북한의 비핵화는 강력한 대북제재로부터 견인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공통된 판단과 역행하는 남북경협 가속은 미국 조야의 극심한 반발을 사고 있음을 지적

42 탈북민 출신 기자 취재배제 방침 고수하는 인권유린 통일부 장관

- 조명균 장관, 남북고위급회담 (10.15) 풀 취재단에 속한 탈북민 출신 조선일보 기자를 회담 당일 취재에서 배제시켜 탈북민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여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음.
  - 국정감사 당 의원의 질의에서도 같은 상황이 전제된다면 같은 결정이 반복될 것이라고 확언하는 등 자국민에 대한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반성은커녕 심각성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됨.
  - 이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취재배제 사태와 무관한 탈북단체 3개와 간담회를 갖고 탈북단체와의 스킨쉽을 강화하고 이해를 구한 것마냥 연출된 행보를 가지는 등 정부의 탈북민에 대한 위선적 태도가 여실히 드러남.

43 판문점선언, 평양선언,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을 두고 오락가락 입맛대로 해석하는 정부의 위헌적 태도

- 통일부 국정감사의 핵심쟁점이었던 '비준 대상 여부'를 두고 조명균 장관의 답변이 질의에 따라 일관되지 못해 헌법과 법률을 오락가락 입맛대로 해석함
  -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일관된 해석을 바탕으로 추진해야 나가야 할 남북정책을 성급하게 추진하다가 위헌 논란을 자초함.

조명균 장관의 10.29 국감 답변

□ '판문점 선언'과의 관계

1) 별개의 합의서다?

- 먼저 비준한 두 개의 합의서는 '판문점 선언'과 별개의 합의서로 본다

2) 후속합의서이지만 별개 합의서이기도 하다?

- 후속합의서 성격도 있지만, 별개 합의서 성격도 있어서 비준을 먼저 했다

□ 비준 필요성에 관해

1) 헌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남북관계발전법은 대한민국 최상위법?

- 헌법의 안전보장에 대한 사안이라기 보다는 남북관계발전법을 우선 적용한 것

2) 조약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때그때 다르다?

- 대통령이 자서전 '운명'에서 북한은 사실상 국가 취급을 받으므로 '조약'성격이므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적시한 사실에 대한 유기준 의원의 질의에
- 대통령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

국방위원회

- ‘북한의 善意’에만 의존하는 문재인 정부의 북한 비핵화
- ‘군사 분야 남북 합의’로 인한 심각한 안보 공백 발생
- ‘국회 패싱’한 문재인 정부의 남북군사합의서 비준 의결
- 한미연합훈련중단으로 한미동맹 및 안보대비태세 약화
- 청와대 지시로 멈춰 버린 미사일 개발
  → 3축 체계 구축에 차질
- 전시작전권 졸속 전환 반대
- 임종석 실장의 대통령 순방 중 비무장지대 시찰은 비서실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사
- 안보지원사 감찰실장에 현직 검사 임명은 국군조직법 위반
- ‘적폐청산’에만 매달린 현 정부 기조 탓에 방위산업 경쟁력 급격히 저하

44 '북한의 善意'에만 의존하는 문재인 정부의 북한 비핵화

- 문재인 정부 출범이래 북한과 가진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한차례의 미북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핵시설을 가동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음.
- 북한은 비핵화의 실질적인 조치인 '핵물질, 핵탄두, 핵시설 리스트에 대한 신고'를 여전히 거부하면서 실질적 비핵화와 관련이 없는 '핵실험장과 미사일 발사장 폐쇄'만으로 미국에 종전선언을 요구
  - 전형적인 북한의 '살라미 전술'이고 비핵화를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속셈
-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성급한 군비통제는 자칫 우리 군의 일방적 무장해제와 방어 전력을 훼손
-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해선 반드시 철저한 한미공조체제하에 대북전략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며 남북관계 개선속도도 북한의 비핵화 진전속도와 맞추어 진행되어야할 것

45 '군사 분야 남북 합의'로 인한 심각한 안보 공백 발생

- 대규모 군사훈련, 무력증강, 봉쇄·차단, 정찰행위를 중단하기로 한 군사 분야 합의서 제1조 1항과 지상과 해상 그리고 공중에 적대행위 금지 구역을 설정한 2항과 3항이 실행되면 우리 군은 향후 한미 합동군사훈련 재개는 물론 우리 군 독자의 대규모 훈련도 어려워지게 돼 심각한 안보 취약성에 노출
- 특히 무력증강 금지는 사드배치, F-35도입 등에 장애물이 될 수 있으며 향후 전반적인 방위력 증강계획에 차질 발생

- 군사분계선 5㎞내 포병사격훈련 금지는 유사시 우리 군의 제1차 차단력을 불능화시킬 수 있고 해상기동훈련 중지는 해군력의 불능화와 NLL무력화를 초래
- 비행금지구역은 수도권 방어를 위한 우리 군의 정찰역량을 크게 제약
- 평화수역 설정은 사실상 NLL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크며 북한이 맘만 달리 먹으면 서해를 침투 통로로 이용함으로써 오히려 분쟁 해역화할 가능성이 증대

46 '국회 패싱'한 문재인 정부의 남북군사합의서 비준 의결

- 국무회의에서 국회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남북군사합의서를 심의·의결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회 무시 처사
- 군사 분야 합의서의 뼈대인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그 이행 안을 국회 동의 없이 비준하는 것은 앞뒤가 뒤바뀜.
- 정부·여당은 군사합의서는 국가나 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고 입법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 (※법제처 해석에 근거)
- 하지만 이번 군사합의로 GP철수 비용이라든가 군사훈련을 위해 무기와 병사들이 이동해야하는 등 실질적 비용이 발생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합의이므로 반드시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비준이 필요 없다고 하는 자체가 '대통령의 독단이고 전횡'

47 한미연합훈련중단으로 한미동맹 및 안보대비태세 약화

-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시작도 전에 한미연합훈련과 우리 군 자체 훈련마저 줄줄이 중단·연기됨으로써 방위력 약화 우려
- 특히 미군은 주요 지휘관·참모 교체주기가 1~2년이어서 연례적 훈련 없으면 유사시 작전 수행에 차질 불가피
- 한미연합훈련 중단으로 주한미군·한미연합사 역할이 축소되고 한미군사동맹의 조정으로 주한미군 역할 논란이 불거질 것이며 결과적으로 한미동맹 약화를 초래
- 연합훈련 중단이 북한의 핵 폐기 유도를 위한 선제적 결정이라 치더라도 앞으로 북한 핵 폐기에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남북군사합의로 대규모 군사훈련중단. 이로 인해 안보대비태세가 크게 훼손

48 청와대 지시로 멈춰 버린 미사일 개발 → 3축 체계 구축에 차질

- 북한 탄도미사일요격을 위해 개발 중인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의 발사 시험이 청와대 지시로 수차례 연기
  - 당초 지난 4월과 6월 서해지역에서 1차례씩 총 2번의 시험발사를 계획했었으나 남북관계의 차질을 우려한 청와대가 시험발사 중단 지시
  - 방어용인 L-SAM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군이 구축 중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무기로 총개발비는 1조 900억으로 2023년까지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잇따른 시험발사 연기로 개발 계획에 차질 불가피

- 정부와 군은 북한 핵 폐기 완료시까지 KAMD와 함께 북 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Kill-Chain, 적 지휘부를 초토화하는 대령응징보복(KMPR)등 3축 체계를 예정대로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KAMD의 핵심무기인 L-SAM시험발사 연기는 정부·군 입장과 배치
-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위권 확보 차원의 방어용 무기 시험까지 지연시키는 것은 사실상 군사 주권을 포기한 것

49 전시작전권 졸속 전환 반대

- 문재인 정부,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는 이유로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 의사 밝힘.
-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국방 장관, 전시작전 통제권의 한국군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령부 창설안(한국군 사령관 체제에 전격 합의)승인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에 속도
- 한미는 2014년 제46차 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에 합의하면서 ▲한국군이 한미연합방위 주도할 수 있는 능력 확보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타격능력과 미사일방어 능력 보유 ▲안정적인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관리될 것 등 3가지 조건 충족 돼야 전작권 환수 가능하다고 못 박음.
- 전작권 전환은 자주국방 달성을 위해 반드시 실현돼야할 과제. 하지만 북한 핵 위협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잇따른 한미연합훈련 중단으로 인한 방위력 약화, 남북관계 개선 속도를 고려해 추진하겠다는 현 정부의 3축 체계 구축계획 등 전작권 전환 여건이 충족되기에는 여전히 불충분

- 전작권 전환은 '시기가 아닌 조건이 중요'하며 준비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자력이 전제되어야 하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안보 환경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때 가능할 것
  - 현 정부는 안보에는 실험이 있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

50 임종석 실장의 대통령 순방 중 비무장지대 시찰은 비서실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사

- 임종석 실장이 아무리 남북공동선언이행위원장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 순방 중에 청와대를 지켜야함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장관·국정원장·주요 지휘관까지 대동하면서 비무장지대의 지뢰제거 현장을 방문한 것은 비서실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사
- 그렇게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으면 차라리 비서실장직 내려놓고 해야 할 것
- 분명 지뢰제거 작업현장 방문이 5천만 국민의 생명, 재산과 영토를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아닐 것
- 각 부 장관을 포함해 국무위원들이 청와대 비서진의 지시를 받으면서 또는 눈치를 보면서 국정을 운영한다면 이는 헌법을 침해하는 것

51 안보지원사 감찰실장에 현직 검사 임명은 국군조직법 위반

- 국군조직법 제16조 1항에는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고 규정돼 있는데 안보지원사에 현직 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안보지원사령부령(대통령령)은 국군조직법 위반
- 국방부는 법제처 해석을 이유로 전반적으로 국군조직법상 공무원 파견과 보직 부여를 제한하거나 금지한다는 규정이 없어 문제없다는 입장
- 국방부가 안보지원사령을 제정하면서 입법예고 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한 것도 문제
- 법 위반하면서까지 현직 검사를 감찰실장에 앉힐 것이 아니라 군대 내에서 제대로 역할 할 사람을 찾아서 임명해야 할 것

52 '적폐청산'에만 매달린 현 정부 기조 탓에 방위산업 경쟁력 급격히 저하

- 현 정부가 추진하는 최우선 국정지표는 적폐청산, 둘째는 남북관계, 방위산업은 맨 뒷전
  - 적폐청산에 매달리다 보니 공무원들은 복지부동, 신규 사업 예산 집행률은 매우 저조
- 더군다나 남북군사합의서의 영향으로 향후 방위력 개선 사업들의 차질 예상되며 일일이 북한의 허락을 받아야 할 처지
- 한국형 전투기개발사업(KF-X)좌초 위기
  - 정부의 사업 수행 전략 부재, 국내 개발역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ROC와 국산화 목표 등으로 실패할 우려 증대. 사업 실패 시 군 노후 전력 대체 차질로 전력 공백 발생, 노후 전투기 연장 운용에 따른 안전성 위험, 천문학적 예산 낭비, 방위산업 기반 붕괴 등 심각한 문제 야기
  - 전체 사업비의 20%를 인도네시아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던 만큼 사업비가 미납되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할 위험에 처해 있어 인니와의 협상 조속한 마무리 필요

행정안전위원회

- 차기 대선 염두, 보여주기식 행정 박원순 서울시장
- 공공기관 캠코더, 보은 인사
- 공무원 증원에 국민 부담 급증, 정부는 무대책
- 정부의 급조된 단기일자리 확대 정책, 국민을 알바로 내모는 졸속 정책
- 정부의 안전불감증, 안전무대책, 안전무능
- 서울시 태양광 보조금사업, 친여권 업체 3곳이 43% 독차지
- 각종 의혹에 도정 수행 차질 자치단체장
- 경찰의 가짜뉴스 단속,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
- 정권 눈치 보기에 정치 중립 의심 받는 경찰

53 차기 대선 염두, 보여주기식 행정 박원순 서울시장

- 큰 성과 없는 박원순 3선 서울시장, 설익은 정책과 채용비리로 혼란 야기
- 지난 1월 미세먼지 대책으로 대중교통 무료 정책 펼쳤으나 150억 원 투입하고도 교통량 감소 효과 미미, 세금 낭비 논란
- 공관을 떠나 강북의 옥탑방에서 한달간 생활, 이를 두고 옥탑방 체험은 대선을 준비하기 위한 정치쇼의 일환으로 평가절하
- 집값 폭등 진원지로 지목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 용산 개발 계획은 집값 안정화를 이유로 전면 보류, 정부 여당은 물론 집 없는 서민들은 박원순 시장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
- 서울도시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비리가 드러났고, 각종 제보를 통해 서울시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음에도 사과 한마디 없이 서울시는 '모르쇠'로 일관
- 박원순 시장은 을과 을의 싸움을 조장하지 말라는 입장만 피력
- 박원순 시장은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프로젝트를 계획하였으나 부실한 계획과 전시행정에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

54 공공기관 캠코더, 보은 인사

- 214개 공공기관에 총 252명의 기관장 및 상임감사 임명 (2018년 7월 기준)
- 이 중 131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거나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자문단·싱크탱크 등 캠프관계자, 또는 공식 지지 선언을 하거나 노무현 정부에서 고위 관료를 지낸 인사
-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캠코더 인사는 수십에서 수백 조 원을 다루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국민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등)부터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음
- 기관장 자리에는 전직 국회의원 등이 상임감사 자리에는 선거 승리에 기여한 사람들이 전문성과 무관하게 임명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 4개월 동안 365명의 낙하산·캠코더 인사가 340개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
- 이는 박근혜 정부 출범 2년 차 때보다도 더 많은 숫자로 박근혜 정부 출범 2년째인 2015년 2월에 언론 보도로 확인된 공공기관 낙하산 임원 수는 318명

55 공무원 증원에 국민 부담 급증, 정부는 무대책

- 문재인 정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공무원 17만 4000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
- 예산정책처 추산, 문재인 정부 공약대로 공무원 17만 4천 명 채용 시 공무원연금 총 92조, 국민 1인당 440만 원 더 부담
- 세금으로 메울 공무원 연금, 올해 2조, 2050년엔 10조, 2055년 누적 적자액 320조 이상
- 일자리 늘리기 명분으로 미래세대에 세금 부담 떠넘기는 무책임 선심 정책
- 인구 줄어드는 지방에 공무원만 늘어나는 상황, 기존 인력 재배치와 함께 효율적 공무원 활용 필요하나 현 정부는 공무원 증원에만 몰두
- 일자리는 민간 기업이 만들어야 하며 공무원을 늘려서 일자리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움.

56 정부의 급조된 단기일자리 확대 정책, 국민을 알바로 내모는 졸속 정책

- 청와대 지시로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대상으로 임시직과 일용직 등 단기일자리 계획 제출을 무리하게 요구해 논란
- 산하기관인 도로교통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공무원연금공단 등도 단기일자리를 급조해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음.
- 정부가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인 기업 환경개선에 역점을 두지 않고, 공공기관을 이용한 체험형

인턴이나 행정업무 지원과 같은 단기 알바형 일자리에 혈안

- 결국은 고용지표 부풀리기에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음.

57 정부의 안전불감증, 안전무대책, 안전무능

- 인천 영흥대교 인근 해상 낚시배 전복 사고
- 충북 제천스포츠센터, 경남 밀양요양병원 및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 등 현정부 들어 다수의 화재 참사 발생
- 최근에는 대형석유 저장시설인 고양 저유소 화재 발생
- 국민안전대진단의 내실화를 통해 국가 안전대책을 강화 하겠다고 했지만 대형 참사는 오히려 더욱 빈번하게 일어남.
- 세월호 이후 안전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기치 아래 행정안전부 내 새로운 조직 신설
- 하지만 대형 참사 후 뒷북 대응은 예전과 전혀 달라진 게 없으며 문재인 정부의 안전불감증 무대책 무능 너무 심각함.

58 서울시 태양광 보조금사업, 친여권 업체 3곳이 43% 독차지

- 지난해 48개 업체에 지급된 정부 보조금중 세 곳이 받은 보조금이 전체의 43%. 지자체 보조금을 더하면, 전체 107억 원 중 40%인 43억여원
- 의혹이 제기된 업체는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해드림사회적협동조합, 녹색드림협동조합 등 3곳으로, 모두 민주당이나 운동권, 시민단체 출신들이 임원을 맡아 운영
- 녹색드림협동조합의 이사장은 고려대 총학생회장, 삼민투 위원장,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 출신으로 지난 16·17대 총선에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했다 낙선한 친여좌파 성향의 인물
-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의 박승옥 등기이사(전 이사장)는 한겨레두레공제조합,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태일기념사업회에서 활동
-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의 현안 챙기기는 뒷전으로 하고 자기편 나눠먹기식 친여 성향 협동조합에 보조금 몰아주기 등 태양광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필요

59 각종 의혹에 도정 수행 차질 자치단체장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수많은 의혹
  - 끝없는 의혹에 도지사 직무 수행 차질 우려
  - 성남FC와 네이버의 유착 관계, 친인척·수행비서 등 채용비리, 측근 비리, 여배우와의 불륜 스캔들,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 등
    ⇒ 자유한국당, 성남 FC비리와 관련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
  - 대한민국 정계에서 가장 긴 범죄 의혹 리스트를 가진 인사

• 김경수 지사, 드루킹과의 댓글 조작행위 공모 여부

- 특검은 공소사실에서 '2016년 11월 경부터 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 및 이후 민주당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캥크랩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했다'고 적시
- 또한 '김 지사에게 킹크랩 초기 버전을 보여주고 김지사의 허락을 받아 프로그램을 본격 개발했다'는 드루킹의 주장이 사실이 라고 판단
- 댓글 조작의 실무를 담당했던 '드루킹' 김모씨(49)의 측근들이 김경수 경남도지사(51)에게 기사 목록을 받아 해당 기사에 대한 댓글 조작을 지시했다고 법정에서 증언
- 이재명지사와 마찬가지로 김경수 지사도 드루킹 댓글 관련 재판으로 도정 소홀 우려됨.

60 경찰의 가짜뉴스 단속,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

• 가짜뉴스 집중 단속에 나선 경찰은 근래 들어 1인 미디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 등 매체가 많아지고 전파성이 강해지면서 가짜뉴스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

• 경찰의 가짜뉴스 단속 호들갑은 최근 집권여당과 좌파 관제 언론들이 부른 광란의 가짜 뉴스 여론몰이 '떼창'에 대한 화답

• 유튜브 가짜뉴스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보수 유튜버에 대한 탄압이 주목적이라는 의견 다수

• 야당시절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개정안까지 발의했던 민주당, 집권 이후 변심

• 정부가 수사기관까지 동원해 규제에 나설 경우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심각한 침해

61 정권 눈치 보기에 정치 중립 의심 받는 경찰

-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의 드루킹 부실수사, 정권 눈치 보기 의혹
  - 이주민 청장,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이 김경수 전 의원에게 드루킹을 소개한 사실을 40여일 전 인지했으나, 당시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음.
  - 김경수 전 의원의 드루킹 관계 규명 핵심인 휴대폰 조사는 필수임에도 URL을 주고받은 사실을 파악하고서도 검찰에 통신·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늦장 신청 했다가 수사 미비를 이유로 기각 당함
  - 경찰은 아무런 수입이 없는 드루킹이 스스로 댓글조작 주체인 경공모를 운영하며 연간 11억 원을 지출했다고 진술했는데도, 이 같은 혐의를 입증할 계좌의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은 채 증거인멸만 가능케 하는 늑장·부실수사로 일관

- 울산지방경찰청, 울산시청 압수수색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 수사 논란
  - 울산경찰청은 지난 3월 자유한국당 시장 후보로 확정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에 착수
  - 경찰은 이 사건을 최근 마무리하면서 김 전 시장 동생과 건설업체 관계자 등 2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김 전시장 형 등 나머지 3명은 무혐의 처리
  -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수사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정치 수사 논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문재인 정부 '문체부 공공기관의 가짜일자리' 실태
- 문재인 정부의 편향되고 성급한 '남북 문화·체육·관광 교류' 실태
- 문재인 정부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 억압' 실태
- 문재인 정부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의 '캠코더(캠프, 코드, 더민주)' 인사
- 문재인 정부 문화예술계의 편향적 행태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의 편향성
- 미흡한 평창동계올림픽 사후 관리
- 문체부 공공기관 대상 졸속 이전 계획
- 문체부·문화재청 관련 예산 낭비·과다 책정 실태

62 문재인 정부 '문체부 공공기관의 가짜일자리' 실태

- 문재인 정부, 기재부의 일자리 창출 확대 요구에 따른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의 가짜(단기) 일자리 모집 실태 지적
  -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단기 일자리 채용에 총 55억 원 예산 투입 예정
  - 캠코더(낙하산) 기관장 인사라고 지적 받은 기관들의 충실한 협조 있었음.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시설운영실태 점검 490명, 한국관광공사 관광특구 내 음식점 실태조사 150명, 생활환경점검 실태조사 50명 등 1~2개월짜리 단기 일자리 모집 실태 질타
  -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단기 일자리 정책으로 인한 예산 낭비 실태 비판
  - 이명박·박근혜정부 행정인턴 채용 관련 당시 야당(민주당)의 비판·지적 사례에 대한 내용 제시, 민주당의 내로남불적 행태 비판
- 문재인 정부의 가짜(단기) 일자리 정책 중지 요청, 양질의 일자리 증진 촉구

63 문재인 정부의 편향되고 성급한 '북한과의 문화·체육·관광 교류' 실태

- 북한과의 문화·체육·관광 교류의 속도 조절 및 상호 형평성 문제 지적
  - 북한 비핵화의 가시적 성과 없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교류에 대한 속도 조절 촉구
  - 북한과의 교류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국내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확충할 것을 촉구
  - 상호적 관점에서의 북한과의 교류 진행 촉구
  - 현실적 여건, 국민적 공감대, 국민의 안전에 대해 고려치 않고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북한과의 문화·체육·관광 교류의 문제점 강력 비판

- 북한과의 문화·체육·관광 교류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및 촉구 조치
  - 북한 문화재 발굴 시 전문 인력 부족, 북한의 문화재 보존 시설의 노후화 등현실적 여건 고려치 않고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류 지양 촉구
  - 북한 체제나 선전에 치우친 영화 위주로 구성되는 북한 영화의 국내 상영 문제점 지적
  - 남북영화교류특위 회의록 일부 인용을 통해 남북영화교류특위 위원들의 편향적 실태와 성급한 교류 추진 의견에 대해 비판, 자제 촉구
  - 남북 관광 교류 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안전의 문제점 제기, 적극적 대응 방안 강구
  -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 방북 시 북한 집단 체조에 참여한 아동 인권 유린에 대한 묵인 사실 비판, 북한 집단 체조의 관광상품화 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 촉구

64 문재인 정부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 억압' 실태

- 문재인 정부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 억압 실태에 대해 비판
  - 통일부가 남북 취재 기자단에서 탈북민 출신 기자 제외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강력 비판, 피감기관인 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의 견해 질의
  - 정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북한 관련 기사와 취재 기자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압박 실태 질타
  - 문재인 정부의 가짜뉴스와의 전쟁 선포 관련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고 강력한 우려 표명
  - 범정부 차원에서 공권력과 수사권을 앞세우며 규제, 처벌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
  - '가짜뉴스'의 정의와 판단 기준의 모호함에 대한 전문가 견해, 구체적 사례 등 근거제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 억압 실태 비판

    ※ 민주당의 가짜뉴스 지목 유튜브 104건 삭제 요청에 대한 구글코리아의 거절 사유 "현재 진행되는 사건에 대한 진실은 파악되기 어렵고, 이분법적이지 않으며 팩트 또한 증명되기 어려울 때가 많다"

65 문재인 정부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의 '캠코더(캠프, 코드, 더민주)' 인사

-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장에 정치편향적 보은 인사 임명 문제 지적
  - 문체부의 각종 업무, 사업, 인사에 대한 주요 결정권자로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의 공공기관장 인선에 따른 '문재인 정부판 블랙리스트' 발생 가능
  - 이명박·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의 주무 부처와 공공기관으로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관련 정당성 확보의 명분 부족
-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장 '캠코더' 출신 인사 현황
  - 문체부 산하 33개 기관 대상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새로 임명된 임원 249명 중 31%인 76명이 '캠코더' 출신 인사
  - 9개 문화예술 기관에서는 72명 중 50%인 36명이 '캠코더' 출신 인사
  - 주요 인사로는 영화진흥위원회 오석근 위원장, 한국콘텐츠진흥원 김영준 원장, 영상물등급위원회 이미연 위원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양현미 원장, 예술경영지원센터의 김도일 대표 등이 있음.

66 문재인 정부 문화예술계의 편향적 행태

-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좌편향적 운영 실태
  - 대한민국 정부수립 70주년 기념전에서 정부수립의 기준을 70년 전이 아닌 100년 전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념물 전시 사례를 통해 정치적 편향성 제기
  - 상설전시실 공간 재배치 세부계획에 대한 이념 편향적 실태 지적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개관(2012) 당시 보수우파적 정치 편향성에 대한 우려로 개관을 반대했던 민주당의 사례 제시를 통해 타당성 있는 문제 제기
  - 특정 정권에 편향되지 않고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역사박물관 운영 촉구

- 영진위 출자 모태펀드의 투자 편향성 의혹
  - 親 정부 인사 제작, 감독 영화인 '다이빙벨 그 후', '버닝' 등의 투자지원 회사가 영진위 출자 모태펀드임을 지적, 공정성 문제 제기
- 親 정부 인사 임명 위한 現 국립현대미술관장 연임 불허 결정
  - 계파와 정치적 편향성에서 자유롭고 업무 능력이 뛰어난 바르토메우 국립현대미술관장이 수차례 연임 의사를 밝혔음에도 문체부가 연임불가 통보를 한 것에 대해 親정부 인사 임명을 위한 결정이라고 비판
  - 국립현대미술관장 후임으로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인사 인선 촉구
- 문화재청장의 국정 역사교과서 참여 문화재위원 대상 사퇴 압박
  - 문화재청장이 국정 역사교과서에 참여했던 문화재위원 3인(임기:19년 4월)을 대상으로 사실상 사퇴 강요
  -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기자간담회(18.9.11)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전체가 불법으로 드러났고 정부 차원에서 고발된 상태로 국정교과서에 참여했던 문화재위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다음 행동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발언
  - 문화재청장의 정치편향적 발언에 대해 질타, 재발 방지 촉구

67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의 편향성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의 형평성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
  - 블랙리스트 관련 조사기간을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한정해 조사하는 것은 진상조사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것임을 강조, 질타
  - 노무현정부 당시 민예총에 대한 편향적 지원 사례 지적함으로써 동일한 관점에서 블랙리스트는 정권마다 반복될 수 있는 사안임을 지적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의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p.71) 내용을 근거로 유진룡 문체부 前 장관, 조현재 前 차관 대상 혐의 의혹 제기

- 블랙리스트 최초 시행자의 의혹을 받고 있는 유진룡 前 장관 무죄임에도 김종덕·조윤선 前 장관은 실형 판결 받았음에도 유진룡 前 장관, 박민권·조현재 前 차관은 처벌에서 제외된 점을 근거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의 진정성과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 제기

68 미흡한 평창동계올림픽 사후 관리

- 평창동계올림픽 사후 관리 책임 소재에 관한 문제 제기
  - 강원도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지속적인 사후활용 방안 제시에 대한 중앙정부와 문체부의 무관심 비판
  - 사후 책임에 대한 부처 간의 책임 회피 지속, 부처 이기주의 질타
  - 문화유산으로서의 올림픽 시설 대부분 철거, 평창동계올림픽 기념사업을 위한 재단 설립, 공원 조성 등을 위한 예산 미집행 상황 지적
  - 정부와 공무원의 나태한 업무 수행으로 인해 평창동계올림픽 기관 공사 전반에 걸쳐 약 1000억 원 체불 발생 상황 비판
  - 올림픽 관광 인프라 조성 사업에서의 수의계약 문제 지적
- 올림픽시설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사후 활용 방안 마련 촉구
  - 평창동계올림픽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수행해 체계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관련 시설의 수익 창출을 위한 합리적 방안 제시

  ※ 올림픽시설 사후 관리 방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18.11.6 예정)

69 문체부 공공기관 대상 졸속 이전 계획

- 국립민속박물관 졸속 이전 계획에 따른 문제점
  - 17년간 추진된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사안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세종시로 졸속 변경 추진 검토 중
  - 세계 유명 박물관 대부분이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사례를 근거로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지역으로 용산 지역 적합 의견 다수
  - 평택 수장고와 세종시와의 원거리 문제 지적
  - 다수의 부적합 의견에도 문체부가 세종시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 지역균형 발전을 빙자한 정치적 논리의 결과물이라고 비판
- 민주당 추진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른 문제점
  - 민주당 이해찬 대표 '지방 이전 추진 대상 공공기관' 122개 발표(18.9.4)
  - 여당 추진 지방 이전 서울 소재 공공기관 중 문체부 소관 공공기관은 총 19개 기관으로 약 20%를 차지함.
  - 지방으로 이전 완료한 공공기관의 비효율적 실태에도 여당의 추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대한 현실적 문제점 지적
  - 예산 소요 증가, 퇴직자 증가로 인한 업무 연속성 저하, 가족동반 이주 비율이 높지 않아 실질적으로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목적 달성에 미흡한 실태 지적, 신중 검토 촉구

70 문체부·문화재청 관련 예산 낭비·과다 책정 실태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산 낭비 실태 지적
  -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투입된 예산 1조 3천억 원
  - 매년 운영 예산 600억 원 지원되나 연간 수익 약 9억 원에 불과, 약 1% 내외의 매우 저조한 재정 자립도 실태 지적
  - 아시아문화전당과 문체부 관련 인력 등의 안이한 업무 태도 비판
  - 운영 방식 전반의 변화와 혁신적 기획을 통한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 장기간 공석인 아시아문화전당장에 능력 있는 인물 인선 촉구
- 북한 문화재 발굴 예산 과다 책정 지적
  - 19년도 북한 문화재 발굴(만월대 등) 예산 17억 원에 대한 과다 책정 문제 지적
  - 관련 예산 산출 근거 자료 요구, 면밀한 검토를 통한 예산 낭비 방지 촉구
- 과다 인건비로 인한 생활체육 지원 사업 축소
  - 생활체육 관련 예산의 절반이 대한체육회 임원 연봉으로 책정된 실태 지적
  - 과다 인건비로 인한 생활체육 지원 사업 축소 실태 질타, 시정 촉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농심에 반하는 정부의 “쌀 목표가격”
- 뒷순위! 홀대! 농어업 예산
-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전 국토가 몸살
- 실업률 통계 왜곡, 가짜 일자리 및 채용 복마전
- 文정부의 준비 안된 PLS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밀어 붙이기
- 학교 급식 안전망 체계 구멍
- “어촌뉴딜 300” 장밋빛 추진
- 북핵폐기 이전 섣부른 평화무드 “공동어로 구역” 협의

71 농심에 반하는 정부의 "쌀 목표가격"

- 정부는 농업소득보전법령에 따라 '18~'22년산 쌀 목표가격(기존 188,000원/80kg) 동의요청서를 11월 초 국회 제출 계획
- 정부는 쌀 목표가격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194,000원 수준으로 제시할 예정
- 농민들이 바라는 차기 쌀 목표가격은 24만5천원 수준

72 뒷순위! 홀대! 농어업 예산

- 문재인 정부 들어 농어업 예산 축소 등 농어업에 대한 홀대 심화

<정부 총예산 대비 농림부 해수부 증감비율>

<정부 총예산>		<농림부 예산>		<해수부 예산>	
2017년도 400.7조 원		14.4조 원		4.9조 원	
	7.1%↑		0.5%↑		1.4%↑
2018년도 429.0조 원		14.5조 원		5.0조 원	
	9.7%↑		1.1%↑		1.1%↑
2019년도 470.5조 원		14.7조 원		5.1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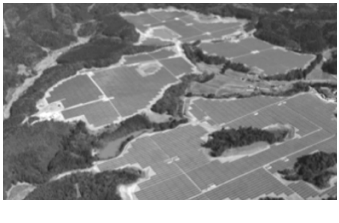
- 내년 정부 총예산의 9.7% 증가에 비해 불과 1.1% 상승에 그친 농어업 예산
- 정부 총예산 대비 비중을 보면 2017년 농업예산은 3.6%, 어업예산은 1.2%였으나 2019년에는 농업 3.1%, 어업 1.1%로 축소
- 농어업 관련 文정부의 국정과제 달성 의지 의문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정부 총지출은 2018년 428.8조 원에서 2022년

567.6조 원으로 연평균 7.3%씩 증가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은 2018년 19.7조 원에서 2022년 19.6조 원으로 연평균 0.1%씩 감소 예정

73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전 국토가 몸살

- 농촌과 농업을 위협하는 태양광 부작용에도 대책 없이 끌려가는 농림부
- 무리한 신재생에너지 확장 정책으로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벌채·식생·지형·경관훼손 등으로 인한 산사태 발생 및 토사유출 피해 발생과 주민 갈등 유발
- 태양광 사업 참여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 시공 하자, 분양·부지 매매 사기 등 발생
- 농림부는 구체적인 사업검토도 없이 '22년까지 3.3.GW '30년까지 10GW 신재생에너지 공급 추진
- 산림청 자료를 보면 작년 한 해 산지 태양광 개발 면적이 1435만㎡임. 하루걸러 축구장 한 개 규모의 숲이 훼손되었음.
- 한국농어촌공사의 공동체활성화 저수지 태양광발전소 시범사업 5곳 중 3곳은 전력계통 연계불가. 내년 후반기('19.9)에나 가능, 사업지 선정 시 한전과 구체적 협의도 없이 결정

<도룡뇽보다 심각한 산지 환경훼손>



<일본 가와지마 태양광 저수지 대형녹조 >

74 실업률 통계 왜곡, 가짜 일자리 및 채용 복마전

- 기획재정부의 "각 부처 단기 일자리 만들기 지침"에 따라 2~3개월 단기 아르바이트를 일자리로 급조하는 등 정부의 단기일자리 확대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및 산하기관 (비정규직⇒정규직) 전환자 수 6,500여 명
- 특히 작년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평가에서 마사회가 1등은 일주일에 1~3일 일하는 무기계약직을 주 5회 근무기준으로 수치화한 것으로 통계 산출의 꼼수임을 질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및 산하기관의 기존 직원 친인척 120명 이상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관련 문제점 지적

75 文정부의 준비 안된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밀어 붙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1.1.부터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 예정. PLS는 농약 오남용을 막기 위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외에는 모두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거나 사용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적합한 농산물은 판매를 금지하는 제도
- 그러나 'PLS제도(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농민의 28.5%(10명 중 3명)가 아직도 PLS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농진청의 직권등록 농약 PLS 등록률은 고작 14%에 불과, 정부의 준비 미흡
  - 소면적 재배 219개 작물은 5,475개의 농약 등록이 필요하나 현재 등록된 농약은 미비한 상태
  - 2019년 1월부터 PLS 전면 시행 시, 잔류농약으로 인한 농식품 부적합 건수 부적합률은 8.8%로, 적용 전 3.3%에 비해 두 배에 가까운 5.5%의 부적합률 상승 예측

76 학교 급식 안전망 체계 구멍

- 최근 2018년 현재까지 125개 학교에서 5,385명의 학생에게 식중독 발생. 2017년 식중독 발생 학교 27개(2153명) 대비 증가
- 식중독이 발생한 학교 가운데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전자조달 시스템으로 식자재를 납품받은 학교 비율은 80%로 매년 증가 추세
- 식중독균의 잔류허용 기준치가 없어 농식품부는 농산물에서 아무리 많은 식중독균이 검출되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 현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은 이용 수수료 명목으로 지난해 60억 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림에도 학교급식 안전문제 외면

<최근 5년간 식중독 발생 학교 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거래 비율>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9.
식중독 발생 학교 수	44	51	38	36	27	125
농수산물유통공사 통해 납품받은 학교 수	16	19	21	28	22	99
비율	36.4%	37.3%	55.3%	77.8%	81.5%	79.2%

77 "어촌뉴딜 300" 장밋빛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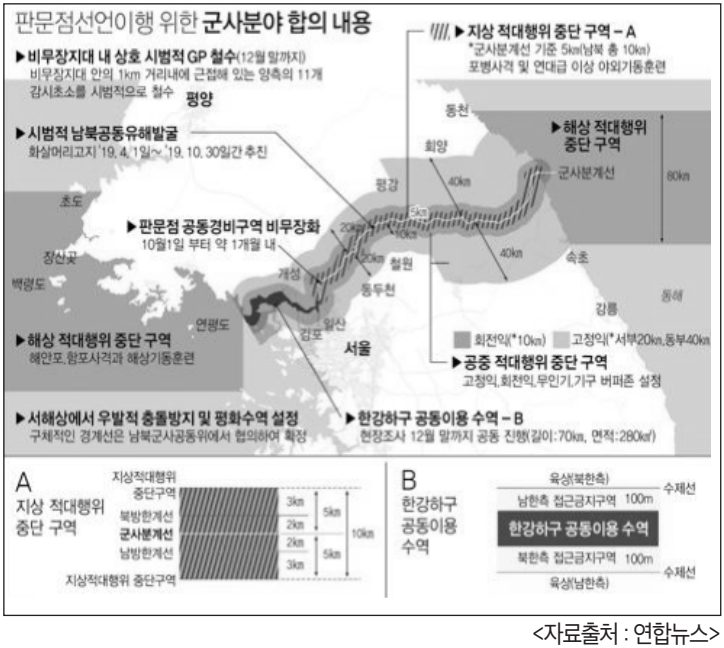
- 어촌어항 현대화를 추진하는 '어촌 뉴딜 300' 사업은 300개소(올해 70곳 선정)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3조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 그러나 내년도 수산·어촌 예산안이 '어촌뉴딜 300'에 매몰돼 어업정책이 실종됐다는 지적

- 해수부 내년 전체 예산이 5조 1천억 원임, 특히 수산·어촌분야 예산은 2조 2284억 원으로 편성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속적인 예산 확보가 가능할지 의문임.

- 어촌 스스로의 사업 추진 역량을 갖추지 못해 사업이 중단되거나 방치된 사례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어촌체험 마을사업의 경우에도 전국 111개 어촌체험 마을 중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어촌마을은 전체의 30% 정도에 불과
  - 사업 추진 대상 항·포구에서의 △해상교통시설 정비 △해양재난사고 대응 △어촌 관광수요 창출 △어촌마을 재생 부문에서 사업은 이미 추진 중인 사업으로 번듯한 건물만 있는 중복 SOC 사업일 가능성이 있음.

78 북핵폐기 이전 섣부른 평화무드 "공동어로 구역" 협의

- 남측의 백령도와 북측의 장산곶 사이 서해 바다에 남북이 공동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공동 어로구역" 시범 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
- 구체적인 경계선 등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
- 남북군사합의서에 따른 서해 NLL 상 공동어로구역 내 무장 선박 진입 불가에 따른 해경의 중국 불법 조업 어선 단속 무력화 지적



<자료출처 :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재앙적 탈원전 정책 비판 및 철회 촉구
- 북한산 석탄 밀반입
- 졸속적 최저 임금제와 52시간 연장 근로 등으로 인한 대한민국 경제 악화
- 중소기업 옥죄는 중소기업 정책
- 국민을 위한 산업 전환은 없고, 1인을 위한 산자부의 정책 집행
- 세습 일자리, 단기 일자리 정책, 캠코더 인사로 피멍드는 일자리 정책

79 재앙적 탈원전 정책 비판 및 철회 촉구

- 문재인 정부의 도그마 같은 재앙적 탈원전 정책은, 절차를 무시한 국가의 폭력적 정책 집행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했고, 안전하고 경제적인 대한민국 원전 산업을 퇴행시킨 시대의 비극

- 절차적 민주주의 무시
  - 공론화 없는 재앙적 탈원전에 국민 의견은 없음.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치러진 졸속적인 한수원 이사회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지역 주민을 무시한 국가의 폭력임.
  - 한울 3,4호기 공사 중단으로 지역 주민은 국가에 대한 영구적 신뢰 상실

- 막대한 경제적 부담
  - 한전·한수원 막대한 적자를 국민 세금·전력산업발전기금으로 틀어막기를 감행하고 있음.
  - 최악의 기업환경에 전기요금 인상은 수출경쟁력 악화를 가져올 것.
  - 원전 경제상대 중국에 세계 원전 수출 추월 우려도 드러나고 있음.
  -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정책은 특정 부류의 특혜 의혹으로 불거지고 있음.

- 미래가 없는 재앙적 탈원전
  -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 만들어낸 원자력 기술 사장(死藏) 예상됨, 4차 산업혁명은 안정적 전기 공급 없이는 불가능한데, 간헐적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신재생 에너지 정책은 대한민국 국토 파괴, 자연유산의 흉물화(凶物化)를 가속화 하고 있음.

80 북한산 석탄 밀반입

- 유엔 안보리 제재 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밀반입되었다는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강력 비판하고, 장래에 국제 사회의 일원인 대한민국이 국제 규약 규범을 준수할 것을 강력 요청함.

- '모르쇠'로 일관한 담당자와 북한산 석탄 인지 정황
  -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북한산 석탄 정황이 분명함에도 관련 발전사는 피해자 코스프레만 하고 있음. 발전 관계자는 새로 물품 들어온 것은 아니며, 담당 직원 확인하니까 알 수 없다고 했고, 북한산이 러시아 탄과 가격과 칼로리가 비슷했다는 말만 되풀이함.
  - 이에, 우리 의원들은 관련 증인들을 심문하는 등 국감 중 최선의 노력을 다해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했음. 또한, 세관 담당자들이 관련 통과보류 사유인 북한산 우회 관련 사실을 통보했는데도 이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발언을 하고 있는 증인들에 대해서 위증으로 혐의 고발했음.

81 졸속적 최저 임금제와 52시간 연장 근로 등으로 인한 대한민국 경제 악화

-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직격탄을 맞은 기업이 투자를 대폭 감소시키고, 경기가 악화된 것이 현실. 한 집 건너 문 닫는 가게가 생기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찾아 해외로 망명을 떠나는 가슴 아픈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
  -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중소기업인의 목을 옥죄는 제일 큰 원인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경제 현실이 전 정부나 전전 정부의 정책 탓으로 돌리고만 있음.

82 중소기업 옥죄는 중소기업 정책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상공인을 대변하고 지원해야 하는데,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어 향후 대한민국 중소벤처인들의 미래가 암담함.

- 중소벤처기업부의 안타까운 행태
  - 중소벤처기업부가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 16개 정부기관을 동원해 소공연 소속단체에 대한 조사 실시 공문 보내는 등 최저임금제 졸속 인상 반대 소상공인 단체에 대한 탄압을 한 의혹에 대해 강하게 질타
  - 또 중기부가 중소·영세 상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소득주도성장 전도사로 홍보만 매진했다는 의혹도 아울러 공개됨.
  - 소상공인진흥공단 이사장 등의 前정권 인사의 퇴임 압력을 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고, 상생을 위해 중기제품을 써달라 했던 장관 관사에는 대기업 제품이 가득했다며 비판

83 국민을 위한 산업 전환은 없고, 1인을 위한 산자부의 정책 집행

-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산업 전환에 힘써야 할 산자부가 1인을 위한 부서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안타까운 상황

- 국민 없는 산업부
  - 천문학적 적자에도 수천억 원 한전공대 설립을 추진하는 한전과 관계부처. 에너지 전환이라는 말 한마디에 산자부와 한수원이 벌이는 기가 막힌 행태에 국민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오직 1인을 위한 부서로 전락
  - 마지막 보루인 자동차·반도체 기업들이 경영 악화가 진행 또는 예상되는 상황에서 선도적 산업전환이 절실한 시기에 산업부와 관계 기관은 오로지 1인의 입만 바라보며 안타까운 정책 집행과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있는

상황에 국감에서 의원들 집중 성토와 대안 제시로 정책 집행 방향 전환을 강력 요구

84 세습 일자리, 단기 일자리 정책, 캠코더 인사로 피멍드는 일자리 정책

-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세습 일자리 비리로 촉발된 문재인 정부의 세습 일자리와 하반기 통계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기재부 발 단기 일자리 사태는 가뜩이나 힘들게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들의 마음에 피멍을 들이고 말았음. 더욱이, 캠코더 인사로 불리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의 편협성은 '사람이 먼저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무색케하는 적폐의 전형을 보여 주었음.

- 친인척 세습 일자리, 단기 일자리, 캠코더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新적폐
  - 적폐를 이유로 前정부와 前前정부를 비판하던 문재인 정부가 전근대적인 일자리 구태를 반복하고, 결국 그들끼리의 일자리 카르텔을 형성하는 新적폐가 되었다는 지적이 많았음.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의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피멍을 남긴 문재인 정부의 안타까운 일자리 백태

보건복지위원회

- 2088년 누적적자 1경 7천 조
  "국민연금 총체적 난국"
- 보험료 폭탄 숨어있는 "문재인 케어"
- 文정권, "가짜일자리" 및 "고용세습" 관련
- 코드·낙하산 인사 "박경서 회장, 정기현 원장"의 민낯
-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운용 개선 촉구
- "해썹 개선"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제고" 등
  국민 먹거리 안전 도모
- "어린이집 인증서류 불법 거래" 알고도 방치
- "결핵 후진국" 오명 청산을 위한 대책 촉구
- 사회서비스원 설립 지적

85 2088년 누적적자 1경 7천 조 "국민연금 총체적 난국"

- 국민연금 2088년 누적적자 약 1경 7000조 원
  - 소득대체율 40% 유지 시 상황, 소득대체율 인상 시 더 심각한 상황 초래
  - 2042년 적자전환, 2057년 기금소진, 2088년 수입보다 지출 3배 이상 차이
  - 70년 추계 아닌 40년 것만 보여주고, 눈속임하는 행태 지적
- 국민연금 외화금고은행 선정 관련 수상한 거래 의혹
  - 하나은행이 국민연금 외화금고은행으로 선정된 직후, 1천억 공약 이행사업 협약 체결
  - 사실상 복지부가 사회공헌을 빌미로 하는 정권코드 맞추기의 통로 역할
  - 채용비리 의혹의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MOU 체결 후 불기소 처분
- 수익률 저조 고려 안 한 부실한 4차 재정추계
  - 4차 재정추계 시 기금투자수익률을 평균 4.9%로 가정했으나 올해는 1.39%에 불과
  - 기금투자수익률 0.1% 하락 시 기금고갈 시점 10개월 단축
  - 자산의 현금화 지연 등 다양한 변수를 무시한 4차 재정추계의 문제점 지적
-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 지연
  -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살펴 그해 10월까지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해야 하나 최근 국회제출 11월로 지연
  -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국회 제출은 시행령에 명시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스스로가 어기고 있는 실태 지적
- 복수안 제시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
  - 정부가 최선의 단일안을 제시해야 함이 당연함에도 복수안 제시로 책임을 회피하고 논쟁의 중심에서 벗어나려는 꼼수, 무책임 지적
  - 복수안은 더 큰 혼란만 야기, 장관의 책임 있는 행정 강력 요구

- 소득주도성장이 초래한 국내경기 침체와 최악수준의 국내주식투자 수익률 지적
- 역사전공 이사장, 언론사 출신 감사 등 낙하산 보은인사, 비전문성 문제제기

86 보험료 폭탄 숨어있는 "문재인 케어"

- 16년 보장률 하락으로 인한 소요재정 재추계 필요성
  -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 정부는 5년간 30조 6천억 추가 재정이 소요된다고 밝힘.
  - 30조 6천억은 '15년 보장률 63.4%를 70%로 올리는 것에 대한 추계이고 '16년 보장률 62.6%(0.8% 하락)에서 70%까지 확대에 대한 새로운 재정추계 반드시 필요
- 2011년 이후 최고치 인상
  - 내년도 보험료율 3.49% 증가해 6.46%로 결정, 2011년 이후 최대치 인상
  - 17년 문케어 발표 당시 지난 10년간 평균 인상률인 3.2% 한도에서 인상하겠다고 밝혔으면서도 이를 어기고 폭탄 인상, 사실상 서민 증세
- 차기정부 12조 적자, 법정준비금 2027년 고갈
  - 2022년까지 13조 5천억 원 적자 발생, 차기정부에서도 12조 1천억 추가 적자 발생
  - 법정준비금도 올해 18조 9천억 원 규모에서 2027년에는 완전히 소진
- 재정절감 대책 부실
  - 대표적인 재정누수인 부당이득 환수결정액이 2012년 이후 평균 100% 이상 증가 그러나 징수율은 10% 수준까지 떨어짐.

- BIG 대형병원 쏠림 및 의료이용량 증가에 따른 대비 부족
  -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빅5 병원 진료 현황에 따르면, 전체 진료비 대비 빅5 병원의 진료비 비율은 2013년 5.4%에서 2017년 5.8%로 증가 추세
  - 의료이용량 OECD 평균 8.3일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18.1일
  - 급여화로 인한 의료이용량 증가, 65세 이상 급여비 급격한 상승 대책 전무
- 쉬운 급여화 151개만 추진
  - 급여화 추진 3800에서 3601로 바꾸더니, 현재 급여화 진행은 151개 수준
  - 목표대비 4.1% 수준으로 매우 저조함에도, 대체적으로 쉬운 급여화만 추진
- 급여화 부분보다 세대 간 이해를 위한 재정 및 보험료 인상과 관련된 홍보 강조 필요
- 건보공단 내부 직원들의 과도한 문재인 케어 찬양적 언론 기고 지적

87 文정권, "가짜일자리" 및 "고용세습" 관련

- 가짜일자리 계획 전수조사 실시 및 대대적인 문제제기
  - 복지부 산하 23개 기관, 식약처 산하 5개 기관 총 28개 기관 전수조사 실시
  - 일자리 통계조작을 위해 청와대 지시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초단기 일자리 증원에 대하여 대대적인 문제제기 실시
  - 일자리 쇼크에 빠진 청년과 서민들을 우롱하는 文정권의 행태 강력 전파
- 고용세습 의심사례 전수조사 실시
  - 복지부 산하 23개 기관, 식약처 산하 5개 기관 총28개 기관 전수조사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을 제외한 27개 기관 회신

88 코드·낙하산 인사 "박경서 회장, 정기현 원장"의 민낯

-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의 그릇된 성인식과 권위 의식
  - 성희롱 발생 시 일반 직원들은 해임까지 되나, 박경서 회장의 경우 징계위 자체도 안 열림, 관련된 내부고발자 공개 요청까지 지속 반복적 요구
  - 감사실장 공개임용 전 감사원에 인사 추천 요청, 특정인 퇴직일에 맞춰 공고 후 최종 합격, 전형적인 전관예우 행태
  - 활동비 인상 요구 및 의전차량 교체, 비서실 직제신설 및 대규모 비서실 사용 지적
  - 국민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봉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망각한 기관장 사퇴 촉구
-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의 무능과 나태한 태도
  - 간호사 마약류 차량 보관 사건, 남자간호사 사망사건, 의료기기영업사원 대리수술 사건, 독감백신 불법구매 투약사건 등 민간병원보다 못한 국립중앙의료원의 현 실태 지적
  - 역량 부족한 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의료발전종합대책 심각한 우려 제기

89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운용 개선 촉구

- 최근 3년간 닥터헬기 이착륙 사용불가 기각·중단 사유 중 비인계점 사유 61.3%
  - 최근 3년간 닥터헬기 이착륙 사용불가 건수 총 80건, 사유로는 비인계점 사유 61.3%, 주차장 만차 사유 13.8%, 행사 진행 사유 10%, 제설 미실시 7.5% 순
  - 응급환자 이송 가능 헬기를 보유하고 있는 부처(복지부, 해경, 소방청) 독자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이착륙 협조 불가능한 실태 지적

- 영국은 환자가 50m 이상 이동하지 않도록 '알파' 포인트 지정, 어디서나 이착륙 가능

• 소음 등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 촉구

- 닥터헬기의 운용율을 높여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닥터헬기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를 주변에서 함께 나누며 감내해 줄 수 있는 시민의식 개선 강조

90 "해썹 개선"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제고" 등 국민 먹거리 안전 도모

• 국민 신뢰도 떨어진 해썹(HACCP) 제도 개선 필요성 강조

- 살모넬라 식중독 초코케이크 57개 급식소에서 2,077명 식중독 발생
- 제품생산 업체, 원료 납품업체 모두 해썹 인증 업체임에도 사고 발생
- 인증심사 인력, 사후관리 인력 부족 등 부실 인증 불가피 지적
- 인증만 받으면 된다는 식의 '인증장사' 행태 지적

• 현지실사 회피 조장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 허점 지적

- 식약처 현지실사 결정한 247개 업체 중 연락되지 못한 34개 업체 현지실사서 제외
- 현지실사 회피 업체 대장균 검출 등 부적합 비율 10배 이상 높음
- 현지실사 회피업체가 부적합 판정 시 폐기 또는 반송 조치되나 현지실사에서 부적합 판정 시에는 수입중단 조치가 되어 사실상 현지실사 회피 조장

91 "어린이집 인증서류 불법 거래" 알고도 방치

- 어린이집 인증평가 서류 인터넷 불법거래
  - 보육일지, 영유아 관찰기록 등 보육교사가 아이 개개인을 관찰해 작성해야 하는 일지들이 온라인상에서 버젓이 불법으로 거래 실태 지적
  - 인증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는 '대행 알바'도 만연한 상황
- 한국보육진흥원이 사실을 알고 방치하는 등 평가인증제도의 허술한 관리운영 지적

92 "결핵 후진국" 오명 청산을 위한 대책 촉구

-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결핵 후진국 실상 지적
  - 작년 환자 3만 명 중 27%가 회사원, 특정사업장의 경우 190명의 결핵 환자 발생
  - 역학 조사원, 결핵 환자 추적관리, 복약지도 담당 간호사 등 인력 부족 지적
- 잠복 결핵에 대한 선제적 조치 사실상 포기수준 지적

93 사회서비스원 설립 지적

- 공공부문 비대화, 혈세 충당 공무원 증원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81만 개 중 34만 개에 해당
  - 공공 사회복지 종사자를 대거 늘림으로써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증가라는 통계 수치에 억지로 맞추려는 의도
  - 혈세로 공무원 증원은 일자리 창출이 아닌, 국민 미래 부담에 직격탄
- 소요재정 대책 미비
  -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한 중장기 소요재정 추계와 재원조달 방안 전무
- 민간인프라가 정착된 국내상황에서 민간의 자율성 및 창의성 침해, 현실 간과
  - 민간인프라가 정착된 현 국내 상황에 적합한 정책인지 신중 검토 필요
  - 민간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직접 서비스 침해 우려
  - 기존 사회복지법인의 위상과 기능을 저해하고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

환경노동위원회

- 소득주도성장의 허구성
- 시장현실을 무시한 최저임금 과속 인상
- 가짜 일자리 등 허울뿐인 일자리정책
- 노동권 사각지대 방치
- 정치편향 4대강 관리
- 준비부족 물관리 일원화
- 현장무시 부실환경정책
- 월권적인 적폐몰이 행태

94 소득주도성장의 허구성

-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불균형 ⇨ 혁신성장 붕괴
- 고용이 유지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득 발생 불가
  ⇨ 소득 → 소비 → 투자의 선순환 구조 붕괴
- 4차 산업 대비 전무 ⇨ 성장 동력 상실
- 수출산업의 긍정적 낙수효과는 무시한 채, 부정적 사례만 강조
  ⇨ 글로벌 경쟁력 상실
- 1분위 가계소득과 5분위 가계소득 차이가 커지며 소득양극화가 심화, 잘사는 사람만 잘살고 못사는 못살게 하는 최악의 정부

95 시장현실을 무시한 최저임금 과속 인상

- 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식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이들의 생존권을 위협
- OECD에서도 우리나라 최저임금 과속 인상이 유례없는 수준이라 지적

> 대통령 임기 내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된다면 2017년과 비교해 누적 상승률은 54%에 이른다. 이는 OECD에서 유례가 없는 수준으로, 중위임금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까지 최저임금이 상승한다는 것
> 기업 생산성 증가가 뒤따르지 않으면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 수준을 목표치 이상으로 상승시키고, 한국의 국제 경쟁력에도 타격을 입힐 것
>
> (2018년 한국 경제 보고서)

-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
  -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실제 일하지 않았지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 이로 인한 2차 쇼크 발생
-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자문위원을 겸임하고 있거나 캠코더 인사로, 정책중립성 훼손 우려
- 최저임금 결정방식이 30년 전의 후진적 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업종별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결정

96 가짜 일자리 등 허울뿐인 일자리정책

- 정부의 단기일자리 양산 지침은 고용지표가 악화되자 통계지표를 속이기 위해 국민 세금으로 2개월짜리 나쁜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
-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고는 다시 비정규직을 양산해,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의 이중성 표명
-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 의문
  -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 국민혈세로 직접 보전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신청률(9.28 기준)은 122%인 반면에 집행률은 44% 수준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취약계층 참여비율은 36.3%에 그치고 취업률이 40% 수준
- 문재인 대통령, 지난해에는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하더니 최근 "좋은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든다"고 말 바꾸기 한 것은 일자리 정책 실패를 자인한 것
-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개혁, 노동개혁, 구조개혁이 동반되어야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개혁에 미온적

97 노동권 사각지대 방치

- 보조출연자, 골프장 캐디, 집배원, 플랫폼 노동자 등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책 전무
- 장시간 근로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인 현장간호사, 방송인 등에 대한 정책 개선 미비
- 장애인 근로자 지원 정책의 실효성 의문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조치 미이행

98 정치편향 4대강 관리

-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대책 없이 보수정부 흠집내기 차원에서 일방으로 4대강 보 개방
- 보 개방으로 인해 수막재배, 농업용수 부족, 수력발전 미가동 등 부작용 발생
-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긍정 효과가 평가·인정되었음에도 사업 실패 주장
  - 4대강 조사평가 결과,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되는 수자원은 본류 주변 가뭄발생 지역에 활용 가능하고 유지유량 증가에도 기여 △저수지 둑높임을 통해 최대 30년 빈도의 가뭄에도 대비 가능 △대부분의 구간에서 사업전보다 홍수위험지역의 위험도 감소되었다고 평가
  -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4대강의 긍정 효과를 인정

(문재인 대통령) 물을 가두는 효과는 인정해야
(17.7.29, 산업·환경·국토부 업무보고)
(이낙연 국무총리) 농업용수마저 부족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는 이때에 수문 보를 지금보다 더 개방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 현장의 과학적 판단이 매우 중요(17.6.21, 낙동강 강정보 현장 방문 시 환경단체의 보 추가 개방에 대한 답변)
(김동연 경제부총리) 일부 긍정효과 있어(17.6.7,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99 준비부족 물관리 일원화

- 물관리 일원화가 예견된 만큼 사전에 조직진단 및 업무분장이 진행됐어야 함에도 법 개정 이후 관련 업무를 진행, 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의 중복유사업무로 인한 예산·행정낭비
- 하천법이 국토부에 존치함으로써 하천관리 이원화로 인한 행정비효율 야기
- 댐관리 일원화가 지연되어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별도로 댐을 관리함으로써 한수원 소관 댐의 용수 공급력과 홍수조절력은 제로에 불과

100 현장무시 부실환경정책

- 의료폐기물 처리 과정에서의 환경오염 및 감염가능성 우려
- 영농폐비닐 처리시설 등 환경관련 시설 설비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 근로복지공단 소속 산재병원의 시설 및 의료장비 노후화 심각
- 실내공기질 기준 관련, 시행령이 규정한 담당자의 회의 대참 문화 만연, 비과학적 기준 설정 등 부실 운영
- 지자체에 관리를 전가하여 제도적 부실 위험
- 예산 및 인력 부족을 이유로 제도 및 시설 관리 미비

101 월권적인 적폐몰이 행태

- 고용노동행정개혁위가 노조의 주장만을 조사대상으로 삼고,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도 전면 재조사하는 등 편향적인 행태
- 적폐청산을 이유로 과거 정책 중 상당수를 뒤집거나 폐기하고, 이에 관여했던 공무원들도 좌천성 인사발령, 공무원으로 정책을 수행했다고 불이익을 받는다면 공무원의 복지부동만 야기
-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과속인상 반대 집회를 개최하자 정부가 연합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예산을 깎는 등 탄압 시도

국토교통위원회

- LH,한국도로공사,한국철도공사 등 단기알바성 가짜 일자리 만들기
- 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수도권 택지개발계획 불법 유출' 사건
-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 부동산 양극화만 심화
- 과속하고 있는 남북경협
  : 국민혈세 부담만 가중 예상
- 적법절차에 의한 해고자 98명, 코레일사장 말 한마디로 일괄 복직 강행
- 서울(포천)-세종 간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부동산 투기 의혹
- 코레일-SR의 일방적인 통합 시도

102 LH,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단기알바성 가짜일자리 만들기

- 문재인 정부의 단기알바성 '가짜일자리 만들기'는 통계수치를 조작하여 일자리 참사 정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나쁜 행태임.
  - 고용의 질 보다는 통계수치에만 집착하여, 통계수치만 그럴 듯하게 나오게 해서 통계화장(조작)을 하겠다는 매우 불순한 의도임.
  -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사라지는 맛보기식 '가짜일자리'가 아님에도, 문재인 정부는 통계수치 조작을 위해 가짜일자리를 양산시키고 있음.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만 해도 정부 지시에 따라 LH 등 23개 기관에서 단기 가짜일자리 12,500개을 만들어 낼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무려 378억 원에 달함.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음.
  -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짜일자리 만들기의 문제점이 드러나자, 국토교통부는 최초 12,500개를 만들 예정이던 가짜일자리를 4,600개로 축소하기로 결정했음. 정부의 가짜일자리 만들기 허구성을 자인한 것임.

103 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수도권 택지개발계획 불법유출' 사건

- 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거짓말 부각
  - 최초, 택지개발계획을 경기도청 공무원으로부터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고 주장함. 그런데, 경기도가 자체조사결과 경기도청 공무원은 연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자 말을 바꿔 김종천 과천시장이라고 실토함.
- 민주당의 '신창현 구하기' 문제점 지적
  -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신창현 의원이 불법유출한 개발계획이 정책자료라며 신창현 의원을 비호함. 민주당 원내대표인 홍영표 대표도 신창현 의원이 공익적 차원에서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였다며 비호함.

- 국토부 자체 조사결과에서도 신창현 의원이 불법 유출한 자료는 대외비이며, 신창현 의원의 행위는 불법이라고 판단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대표들이 신창현 의원을 비호하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기 위한 나쁜 의도임.

• **국토부 자체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문제점 지적**

- 자체조사 결과 이번 불법유출사건의 핵심인물이 신창현 의원과 김종천 과천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당사자에 대한 조치는 전혀 없었음. 반면, 힘 없는 실무자인 LH직원 3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함.
- 국토부가 봐주기 조사라는 오명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신창현 의원과 김종천 시장에 대해 고발조치나 수사의뢰 조치를 반드시 해야함을 강조하였고, 김현미 장관 역시 검찰조사결과에 따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강조

104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 부동산 양극화만 심화

• **문재인 정부 1년 5개월간 서울집값 급등 → 부동산정책 실패**

-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를 분석해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난 9월까지 평균 12.58% 상승함. 이는 초기 2년 이명박 정부(5.86%), 박근혜 정부(0.69%)보다 압도적인 수치로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이 실패했음을 말해주는 것임.
- 또한, 규제일변도 부동산정책은 부동산양극화만 심화시키므로 폐기해야 함을 강조하였음.

• **문재인 정부의 오락가락, 갈팡질팡인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정부를 전혀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 서울집값 상승, 지방 부동산 시장 악화 등 부동산 양극화라는 부작용만 일으키고 있음.**

- 특히, 경남 창원을 비롯한 지방 부동산시장은 집값 하락과 미분양 증가 등 고통을 겪고 있어 지방 부동산시장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 또한, 부동산정책은 단순히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교육·문화

인프라 개발이 병행되어야 하며 특히, 교통대책이 마련된 신도시개발 계획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음. 교통대책 없는 신도시개발 계획은 미분양 증가 등 각종 문제를 양산시킬 수 있음을 문제 제기하였음.

105 과속하고 있는 남북경협 : 국민혈세 부담만 가중 예상

- 대북제재가 유효한 상황에서, 청와대를 중심으로 남북경협을 급히 서두르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제기함.
  - 나진-하산 프로젝트와 북 경제특구사업 검토는 청와대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른 하명조사 가능성에 대해 문제제기 하였음.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9년부터 러시아 연해주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북한 노동자 고용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을 지적하였음. 이 계획은 정부가 공기업인 LH를 이용하여 '대북우회 지원'을 시도한 것임을 지적하는 동시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2375호) 등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를 무력화시키는 시도임을 지적하였음.
- 범정부차원에서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남북경협에 속도를 내는 점을 지적하였음.
  - 남북경협사업에 소요될 국민혈세인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추계도 없이, 남북경협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막대한 재정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범정부차원에서 남북경협 소요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추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106 적법절차에 의한 해고자 98명, 코레일사장 말 한마디로 일괄 복직 강행

- 오영식 코레일 사장 - 코레일노조(민주노총) 합의사항
  - 해고자 98명 전원에 대해 복직시키기로 합의 (오영식 사장 취임 3일차)

- 적법적차에 의한 해고자 98명 전원 복직 → 법치주의 훼손 우려
  - 해고자 98명은 불법파업으로 인해 해임 또는 파면된 자로, 대법에서도 적법절차에 의한 정당한 해임 또는 파면으로 판결이 난 사람들임.
  - 이 98명은 퇴직금도 100% 수령하였음.
  - 대법원에서조차 적법절차에 의해 해직된 자를 더구나 퇴직금도 100% 모두 수령해 간 사람들을 코레일사장 말 한마디로 복직시키는 것은 법치주의 훼손
- 해고자 98명의 복직방식은 특혜채용의 결정판
  - 특별채용이라는 미명 아래 실질적으로는 특혜채용을 하는 꼼수를 부림.
  -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자에게 특별채용의 기회를 준다면, 당연히 정상적으로 공고를 내고 이 경력에 맞는 구직자들이 지원해서 공개경쟁을 통해 특별채용을 해야 함.
  - 그러나, 이번 해고자 98명 특별채용 방식은, 오로지 98명만 지원할 수 있고 그 어떤 심사절차도 없이 98명 모두가 합격하는 특혜채용 방식임.
- 해고자 특혜채용은 결국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또다른 적폐임.

107 서울(포천)-세종 간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부동산 투기 의혹

- 졸속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 실시
  - 한국도로공사가 6개월만에 노선 하나를 새롭게 설계하고, 그에 따라 2개 대안 노선에 대해 전략환경 영향평가를 완료함. 기존 사례와 비교해 볼 때 매우 이례적으로 단기간에 이뤄졌음.
- 비정상적인 업체(개발사업자) 선정 및 개발 행위
  - 개발사업자로 선정된 A업체(세창)는 택지조성 등 실적도 없고, 부동산 개발업 등록도 되어 있지 않았음.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에야 대지조성 사업자 등록을 뒤늦게 한 것으로 보임.

- 노선 변경 지역, 공무원들의 토지매입 사실 확인 (부동산 투기 의혹)
  - 기존 및 변경 고속도로 노선 중심으로 투기가 성행하고 있음. 개발 가능성이나 정보가 있는 임야 등의 토지를 다수가 공유지분을 갖고 매매하는 방식의 투기행위로 보임.
  - 시범사업지 및 인접지역 중심으로 중앙부처 공무원, 지자체 공무원 다수가 시범사업 부지 및 인접지역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됨.

※ 서울-세종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하여 심각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위원회차원에서 감사원의 감사청구가 필요함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음.

108 코레일-SR의 일방적인 통합 시도

- 문재인 정부는 철도산업 공공성 강화라는 미명하에 코레일과 SR 통합 추진
  - 오영식 사장 취임 이후 코레일 자문위원장을 맡은 김태승 교수를, 코레일 - SR통합 용역을 위한 위원장으로 선정한 것 자체가 잘못되었음.
  - 김태승교수 임명은 코레일 - SR 통합을 전제로 한 불합리한 처사임.

- 코레일 vs SR 경영실적 비교

기관	2016년도		2017년도	
	영업이익	순이익	영업이익	순이익
코레일	+ 1,539억	- 2,044억	- 5,283억	- 8,623억
(주)SR	·	·	+ 419억	+ 321억

  -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코레일이, 코레일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한 고민은 전혀 하지 않고 수익이 나고 있는 (주)SR을 통합시켜 적자를 메워보겠다는 발상에 불과함.

- 코레일과 (주)SR 통합은 코레일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진행되어서는 안되며, 통합문제는 국민들의 철도 이용 편의를 중심으로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함.

여성가족위원회

- 공직사회 성범죄 사건처리 매뉴얼 미흡 및 공공기관 성범죄 피해자 대책 필요
- 아이돌보미 제도 개선 필요성
- 성범죄 대응 관련

109 공직사회 성범죄 사건처리 매뉴얼 미흡 및 공공기관 성범죄 피해자 대책 필요

- 고용노동부 지정 강의 내용 및 강사관리 부실
  (30% 정도 실효성 없다고 조사, 강의시간에 교육후원사 홍보 등)
- 공공기관 성범죄 피해자 인내 요구
- 성범죄 예방 교육 실시하나 현황은 보고하지 않고 있는 문제 지적
- 성희롱, 성폭력 등 관련 매뉴얼 불명확 → 여성가족부 법제도 정비 노력
-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 역할 및 사이버 수사 공조체제 구축 강화 필요

110 아이돌보미 제도 개선 필요성

- 아이돌봄 자격 취득관리 허술함 제기
  (1개당 30분 분량, 총 30개 강의 중 16개만 청취 시 자격취득)
  - 강의 파일 빨리 돌리기로 30분 만에 강의 종료 가능
  - 국가의 아이돌봄 서비스 매우 부족, 돌보미 관리 소관부처 없음
    → 여성가족부 관련 대책 수립 필요성 제기
  - 돌보미 관련 실태확인 전수 조사 필요성 및 현실감 있는 대책 마련 주문
  - 1만 8천 가구 순번 대기 중, 아이 폭행해도 자격정지 6개월

  ※ 영국 : 민간베이비시터 신원조회 의무화, 응급조치 필수과목 지정
  미국 :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111 성범죄 대응 관련

- 성범죄 알리미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모바일 앱 설치 불편 등)
- 성범죄자 조회 시 조회하는 사람의 본인 인증 절차 불편
  (성범죄자는 국민 모두가 알아야 하는 사항임에도 과도한 인증절차, 민원 다수 제기)
- 성범죄자의 주소 등 신상정보 파악 어려움(노숙자 등)
  → 제도개선 시급
  ※ 미국 : 보안관이 주민설명회 개최하여 성범죄자 정보 알림, 성폭력 예방교육실시

112

고용세습채용비리

- **[기획재정위원회]**
  2030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긴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
-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교통공사 및 공공기관 고용세습 채용비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재인 정부 '문체부 공공기관의 무분별·무원칙 정규직 전환'
- **[환경노동위원회]**
  고용세습 채용비리
- **[국토교통위원회]**
  서울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공기관의 가족고용세습 채용 비리

기획재정위원회

2030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긴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 문 대통령 취임 후 첫 행보로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를 천명한 것이 계기가 되어 2개월 만에 835개 공공부문에 대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과정 자체가 너무 졸속으로 이루어져 고용세습 등의 채용비리는 예고된 참사, 예견된 부작용이었음. 정규직 전환 발표 시점을 전후로 집중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노조의 무리한 개입 정황도 드러난 만큼 엄중 처리 주문
-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친인척을 대거 고용한 것은 젊은이들의 꿈을 짓밟는 행위로 기재부에 즉각적인 실태조사 실시 요구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교통공사 및 공공기관 고용세습 채용비리

-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 등의 고용 세습 채용비리 확인
-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3월 정규직 전환 무기직 1,285명 중 108명이 기존 자녀 형제 배우자 등 친인척
- 정규직 전환 업무 책임자인 인사처장 배우자는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 됐으나 정규직 전환 108명 공개 명단에서 고의 누락
-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명분 속에 진행된 공공기관의 '친인척 채용' 사례가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서울교통공사를 시작으로 인천공항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총 23개 기관 576여명

- 문재인 정부 하에 자행된 권력유착형 일자리 약탈은 묵묵히 노력하는 청년에게서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빼앗는 배신행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재인 정부 '문체부 공공기관의 무분별·무원칙 정규직 전환'

-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는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따른 세부적인 유의점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에도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 사례 다수

① 국민체육진흥공단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신규 입사자 119명이 기본적인 자격시험 없이 정규직이 됨, 119명 중 98명이 경륜·경정장의 질서유지 아르바이트생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② 국립중앙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은 36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
- 기간제 142명 중 132명이 사서보조나 기록물 관리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 정규직 전환 2~4개월 전 기간제로 입사해 정규직으로 전환

③ 국립중앙박물관

- 국립중앙박물관 무기계약직 713명 정규직 전환
- 기존 정규직 수보다 많은 무기계약직 인원의 정규직 전환 문제 지적

④ 한국정책방송원(KTV)

- 한국정책방송원은 19명이 정규직으로 전환
- 입사 4일차 방송요원 3명, 2개월 전 입사한 방송요원 2명이 초단기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

※ 이외에도 상당수 문체부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속 시행 중

환경노동위원회

고용세습 채용비리

- 일부 부처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친인척의 고용세습 사례 확인
- 이러한 친인척 고용세습은 귀족노조의 채용형 비리로, 기회가 평등하지도 않고, 과정도 공정하지 않고, 결과도 정의롭지 않음
- 블라인드 채용 확대가 오히려 고용세습 채용비리를 야기하는 부작용 발생
- 강성 귀족노조가 청년의 일자리를 빼앗고 아전투구의 장으로 몰아넣고 있음에도 여당은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 요구에 동참하지 않고 있음
- 정부 산하 위원회에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대거 참여, 위원회의 중립성 및 중요정책 왜곡 우려

국토교통위원회

서울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공기관의 가족고용세습 채용 비리

-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 가족고용세습 행태 지적
  - 정규직 전환자 1,285명 중 108명이 친인척이라는 것만으로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으나, 이 조사 자체가 신뢰성이 없어 이러한 친인척 사례는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됨.
  - 全직원 1만 7,400명 중 전수조사에 참여한 인원이 99.8%라는 발표가 허위임을 밝혀냄 :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집행부만 70여 명임.
  - 서울교통공사 인사처장의 경우, 본인의 배우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나 이를 숨기기 위해 고의로 누락하였다가 직위해제(징계) 처분받음 : 이런 사례는 더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전수조사 필요성도 제기함.
-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대상자 친인척 채용 및 비정상적인 직고용 대상자 선정
  -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 선언 이후, 인천공항 협력업체에서 다수의 친인척들이 부당채용된 사례 고발
  -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사례 지적
  -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노조(민주노총)가 부당개입한 의혹 지적
- 친인척 채용비리로 인한 향후 정규직 채용규모 축소 문제를 지적함과 동시에 반드시 국정조사가 필요함을 강조함.

2018 국정감사로 본

문재인 정부
112대 실정

발 행 일 2018. 11
발 행 처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편집·인쇄 디엔시파크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국회본청 233호
02) 6288-0200
홈페이지 : www.libertykoreaparty.kr